



주간통일정세 2012-02(2012.01.02~01.08)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2-02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 '김정일 유언' 잇따라 공개(1/3,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이 발표된 뒤 그가 생전에 했다는 발언 내용을 유훈(遺訓)이라며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이 속속 소개
 - 주요내용은 김 위원장 유고시 아들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권력을 승계해야 하고 그에게 당·정·군이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김 위원장이 분명히 말했다는 내용이 주류
 -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전날 '뜨거운 새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은 우리 대장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될 것이라고 지적하시었다"고 밝힘.
 - 김기남 노동당 비서는 지난달 29일 김 위원장 추모를 위해 평양에서 열린 중앙추도대회에서 연설을 통해 "김정일 동지께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대장님께 충실하고 그의 영도를 잘 받들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밝힘.

- **김정은 北주민에 첫 '친필'...부친 방식(1/3,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근로자들이 보낸 편지를 읽고 답신 차원에서 '친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
 - 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민족대국상의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주체혁명의 새 승리를 위해 역세게 싸워나갈 맹세를 담아 여러 단위 일군과 근로자들이 올린 편지를 보시고 지난해 12월30일 친필을 보내셨다"고 밝힘.

- **김정은 탱크부대 시찰은 선군 선포식(1/3, 조선신보)**
 - 이날 '새해 벽두 탱크사단 시찰에 깃든 뜻'이라는 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역시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이듬해 첫날 군부대를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군부대 시찰은 수령의 후계자에 의한 선군노선의 선포식"이라고 설명
 - 김 부위원장이 지난 1일 시찰한 '근위서울류경수 제105탱크사단'은 6·25전쟁 당시 서울에 처음 입성한 전차부대로, 북한은 김 주석과 김 위원장이 1960년 8월 25일 이 부대를 방문한 날을 '선군영도 개



시일'로 기념

- 신문은 "최고사령관으로 취임한 김정은 부위원장의 새해 벽두 탱크사단 방문은 대국상을 당한 조선의 진로, 강성국가의 대문을 열어제길 올해의 정책방향을 말해준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군대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할 정세의 요구가 있다"고 강조

● 김정은 北탱크부대서 '과감한 스킨십'(1/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첫 공식 활동에서 '인민들과 활발한 스킨십을 과시
- 4일 연합뉴스가 김 부위원장의 지난 1일 '근위서울류경수 제105탱크사단' 방문 장면을 담은 조선중앙TV의 13분짜리 기록영화(3일 저녁 방영)를 분석한 결과, 김 부위원장의 얼굴에서는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애도기간에 눈물을 수차례 흘렸던 슬픔을 찾아볼 수 없었음.
- 제105탱크사단 방문은 김 부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최고사령관에 오른 뒤 김 위원장 추도와 무관하게 벌인 첫 단독 공식활동임.

● 김정은 우상화도 꺾일음... '전지전능 지도자'(1/4, 조선중앙통신)

- 후계수업 기간이 짧은 김 부위원장은 아직 주민들 사이에 인지도가 낮은 것이 취약점으로 꼽혀왔는데 북한 매체가 그를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잇는 전지전능한 지도자로 묘사하며 사실상의 신격화에 본격 착수
- 김일성방송대학의 홈페이지인 '우리민족강당'은 4일 게재한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탁월한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영도는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계승 완성을 위한 결정적 담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김 부위원장을 '백두산형 위인' '백두산형 장군'이라고 띄웠음.
- 논문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는 만경대 가문의 혁명적 신념과 의지, 배짱을 친품으로 지니신 또 한분의 절세 위인"이라며 "선군혁명의 영도자로서 자질과 품격을 최상의 높이에서 체현하고 계시는 백두산형 위인"이라고 주장
- 나아가 김 부위원장이 군사뿐 아니라 정치,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정통하다고 추켜세웠음.
- 논문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군사가적 자질과 영군능력, 정치와 경제, 과학과 기술 분야의 해박하고 다방면적인 견문을 소유하셨다"며 "나라의 국방력 강화와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기쁘게 하는 눈부신 업적들을 쌓아올리시었다"고 주장
- 논문은 "우리 군대와 인민들 속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김정은 동지께서 이룩하신 업적을 널리 칭송하고 그의 영도 따라 힘차게 전진해 나갈 일념을 담은 노래를 지어 불렀다"며 김 부위원장 찬양가인 '발



걸음'을 간접적으로 부각하기도 했음.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김정일 동지의 전사, 제자들 이어!'라는 제목의 '정론'을 통해 "장군님과 함께 헤치시며 성장하신 김정은 동지는 모습도 기상도 수령님 그대로이시고 장군님 그대로이시다"며 "그이의 신념은 백두산악과 같이 억척불변"이라고 3대 세습의 정당성을 강조

● 北 김정은 이상화 극심... "16세에 '영군술' 논문"(1/5,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5일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사상이론의 천재'로 칭송하면서 16세에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업적을 다룬 논문을 썼다고 주장
-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매혹이 터치는 칭송의 메아리'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이(김정은 부위원장)는 10대에 사상이론 활동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는 저술활동을 벌였다"며 "16살에 군사전략가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김일성 주석의 영군술과 그 업적에 대한 다방면적이고도 종합적인 논문을 대작으로 완성해 만사람의 경탄과 존경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

● 北 전역서 '충성맹세' 결의대회(평남·자강·황북·강원·남포서 군중대회)(1/4,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 정치국 결정서와 당 구호, 신년 공동사설을 관철하기 위한 청년들의 결의대회가 평양에서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
- 결의대회에는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참가했고 리용철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 제1비서의 보고와 참가자의 토론이 이어졌음.
- 중앙통신은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청년들이 노동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 보위하는 제일결사대, 육탄돌격대가 될 것을 언급했다"며 "청년들은 인민군대에 적극적으로 입대해 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수호하고 김정은 동지를 통일광장의 단상에 높이 모실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北, 쿠바 주재 북한대사에 장성택 매부 전영진 임명(1/4, 조선중앙통신)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쿠바공화국 주재 조선특명전권대사로 전영진이 임명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전 대사는 장 부위원장 누나의 남편이자 지난해 10월 사망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사돈인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고, 2001년부터 북한의 민간외교를 담당하는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해왔음.



- <북한단신> 노동자·직업동맹 충성 결의대회(1/5, 조선중앙통신)
 -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와 당 구호, 신년 공동사설을 관철하기 위한 노동계급과 직업동맹원들의 결의대회가 5일 남포시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현상주 직업총동맹 위원장과 토론자들은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한 것은 영광이라고 언급하고 김 부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다짐했고, 결의대회에는 리영수 당 부장과 노동자, 직업동맹 관계자들이 참가

- 北총리, 김정일 사후 첫 현지요해(1/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최영림 내각 총리가 6일 평안북도의 동림광산기계공장과 동림전기공장을 현지요해(了解· 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
 -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이후 최 총리가 현지요해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 사회가 전반적으로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음을 보여줌.
 - 최 총리는 동림광산기계공장과 동림전기공장의 생산공정을 돌아보고 관계자와 협의회를 열고 공장 현대화와 생산성 향상 등의 대책을 논의

- 김정은, 2009년 北미사일 발사 현장 참관(1/8, 조선중앙TV)
 -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던 지난 2009년 4월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미사일 관제지휘소를 방문, 발사 장면을 참관한 것으로 8일 확인
 -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처음 방영한 '백두의 선군혁명 위업을 계승하시어'라는 제목의 김정은 이상화 기록영화를 통해 김 부위원장이 2009년 4월5일 '광명성 2호 위성(장거리 로켓) 발사 당일 김 위원장과 함께 '위성 관제 종합지휘소'를 찾았다고 밝힘.
 - 당시 김 위원장은 "이번에 인공지구위성(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적들의 책동에 반타격을 가한 것이 우리 김 대장(김정은)"이라며 "그가 반타격 사령관으로서 육해공군을 지휘했다"고 말했다고 중앙TV는 전함.

- 北 김정은 생일 맞아 분위기 '수위조절'?(1/8, 조선중앙TV)
 -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생일을 맞은 8일 길으로는 별다른 축하행사 없이 차분하게 보낸 것으로 보이나, 김 부위원장의 생일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은 더러 포착됨.
 -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해 1월 올린 비전향 장기수 김동기의 수기 '1월에 비긴 애국장정의 노래'를 다시 실어



눈길을 끌었음.

- 작년 1월 28일 썼다고 소개된 이 글은 "1월 8일, 올해의 첫 눈이 내렸습니다. 우리 인민은 새해의 첫 문을 열자마자 1월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이런 행운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라며 "그 눈송이들은 수령복, 장군복을 대대로 누리는 우리 인민에게 안겨주는 하늘의 축복인 듯 싶었습니다"라고 돼 있음.

● 北 김정은 생일 맞아 우상화 기록영화 방영(1/8, 조선중앙TV)

-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처음 맞은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생일인 8일 김 부위원장을 우상화하는 영상물을, 조선중앙TV는 이날 정오부터 '백두의 선군혁명 위업을 계승하시어'라는 제목의 50분 짜리 기록영화(녹화 영상)를 내보냈음.
- 기록영화 방영에 앞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선군혁명 위업을 승리로 이끌 어오신 불멸의 영도업적을 역사적 화폭으로 감명깊게 보여주는 조선 기록영화가 새로 나왔다"고 소개
- 김 부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달리는 장면으로 시작한 기록영화에는 그가 탱크와 전투기, 군용차량과 군함 등에 탑승한 장면, 북한산 자동보충을 만져보는 모습 등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김 부위원장의 군부대 시찰 모습이 담겨 있음.
- 기록영화는 또 김 부위원장이 '혁명활동'을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서 시작했고, 대학재학 시절 매일 3~4시간만 자면서 공부했다고 전함.
- 기록영화에는 김 위원장이 "우리 대장(김정은)은 16세에 김일성 주석의 '영군술'에 관한 논문을 집필했다"며 "그는 지략도 뛰어나고 군사 전법에 밝으며 다재다능한 천재 중의 천재"라고 격찬했다는 발언 내용도 들어있음.
- 기록영화에서는 김 부위원장이 '근위서울류경수 제105탱크사단'에서 탱크를 타고 달리는 장면도 나온다. 중앙TV는 김 부위원장이 탱크병 전투모를 쓰고 탑승한 '951호' 탱크가 눈길을 달리며 포사격을 하는 장면을 내보냈음.



■ 김정은 동향

- 김정은, 2012년 은하수 신년음악회 '태양의 위업 영원하리' 관람 및 출연자들에게 「감사」 전달(1.2, 중통·중·평방)
- 김영남, 최영림, 리영호, 김영춘, 김국태,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리용무, 오극렬, 강석주, 변영립, 장성택, 김정각, 김양건, 김영일, 박도춘, 최룡해, 김락희, 태종수, 김평해, 문경덕, 주규창, 우동측, 김창섭 등 함께 관람

■ 기타 (대내 정치)

- 신년 공동사설 관련 "함남의 불길은 2012년의 위대한 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의 기치, 새로운 전환의 기치"라고 강조하며 "노동계급은 경제건설에서 생산돌격전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킬 열의에 충만되어 있다"고 선전(1.3, 중통/함남의 불길은 올해의 총공격전의 기치)
- 평양시, 1.3 김일성광장에서 10만여 명 참가下 '정치국 결정서 및 공동구호·공동사설' 관철 군중대회 진행(1.3, 중·평방·중통)
 - 최영림,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최용해, 김낙희, 태종수, 문경덕 (평양시당책/보고), 이무영, 한광복(내각부총리), 이일환(평양시당 비서/사회) 등 참가
- 黨 정치국 결정서·공동구호·공동사설 관철 및 咸南 근로자들의 편지에 호응하는 '청년전위들의 결의대회', 1.4 리용철(청년동맹 1 비서), 최룡해(黨비서) 등 참가下 평양에서 진행(1.4, 중통)
-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쿠바駐在 北 대사로 '전영진' 임명 (1.4, 중통)
- "강성국가를 위한 올해의 대진군은 김정일의 간곡한 유훈"이라며 畝民은 "김정은을 수반으로 黨중앙委 두리에 굳게 뭉쳐 2012년을 성스러운 계승의 해, 강성부흥의 해로 빛내자"고 독려(1.5, 중방·노동신문 사설·중통/위대한 당의 영도따라 2012년의 자랑스런 승리를 향하여 총진군 앞으로)
- 北, "세상만물이 다 변한다해도 김정은의 품을 떠난 다른 삶의 터전을 찾지 않을 것이며, 원수들이 제아무리 발악해도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강성국가를 반드시 건설할 것"이라며 '김정은 결사옹위' 강조(1.7, 노동신문 정론/지구가 깨어진대도)



나. 경제

● 북, 평양제1백화점 상품전시회 개막(1/3, 조선중앙통신)

- 제3차 평양제1백화점 상품전시회가 막을 올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
- 이번 전시회에는 전국 수백 개 공장과 기업소에서 생산된 2천 800여종, 590만 여점의 소비품이 출품

● 중단등 대규모 전력개발.. "北지원 송전용"(1/4, 연합뉴스)

-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신의주와 마주한 중국의 대북 최대 무역 거점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 대규모 전력시설이 잇달아 개발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대북 전문가들은 향후 북한이 개방, 대규모 개발이 이뤄질 것에 대비한 대북 송전용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 중국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현재 단둥에는 북한과 공동 운영하는 수풍발전소와 그 하류의 태평만 발전소 등 압록강에 건설된 2개의 수력발전소를 비롯해 화녕(華能)단둥화력발전소, 진산(金山)열병합발전소, 관톈(寬甸)의 타이핑사오(太平哨)수력발전소 등이 가동 중임.
- 이런 가운데 단둥은 올해 1천 200MW 규모의 보스허(薄石河)양수발전소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며, 화녕화력발전소의 2, 3기 증설(3천 200MW)과 진산열병합발전소 2기(2천MW) 건설도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추진
- 전력뿐 아니라 중국은 이미 대북 진출을 위한 접경지역 교통망 확충에도 공을 들이고 있음.
- 헤이룽장성 수이펀허(綏芬河)에서 두만강과 압록강변을 따라 단둥을 거쳐 다롄(大連)에 이르는 동변도(東邊道) 철도와 선양(瀋陽)-단둥 고속철, 창춘(長春)-훈춘(琿春) 고속철, 단둥-통화(通化) 고속도로, 통화-옌지(延吉) 고속도로 건설 등이 잇달아 건설되고 있음.

● 北 "불에 타지 않는 방화천 개발"(1/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환경공학연구소가 불에 타지 않는 천을 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
- 최근 천의 특성에 대한 평가시험을 통해 천의 방화, 방열특성 지표값들이 국제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입증했다고 전함.

● WFP, "北 10월부터 식량 배급량 증가"(1/4, 미국의 소리(VOA))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 당국이 12월에 주민 1인당 하루 375g의 식량을 분배한다고 미국의소리 방송이 4일 보도
- WFP의 마커스 프라이어 아시아 담당 대변인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배급량이 7~9월 200g에 머물다가 4개월 만인 10월에 355g, 11월 365g, 12월에는 375g으로 늘어났다고 밝힘.



- 북한 당국은 이처럼 식량배급량이 증가한 배경에 대해 가을 추수를 언급했으며 2012년에는 1인당 배급량을 380g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WFP가 소개
- **"北라진항 열린다"…中 석탄업계 대량 증산(1/5, 연변일보)**
 - 중국이 부두 사용권을 확보한 북한 라진항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 석탄업계가 대대적인 생산 설비 증설에 나섰다.
 - 훈춘의 대표적인 석탄 생산업체인 훈춘광업집단이 설비 증설을 통해 올해 연간 '1천만t 채탄시대'를 열게 됐다고 연변일보 5일 보도
 - 팔련성 탄광 등 훈춘 일대 3개의 탄광을 보유한 훈춘광업집단은 연간 채탄 능력이 560만t에 불과했으나 지난 2년 동안 12억 위안(2천억 원)을 들여 채탄 설비를 대폭 증설, 올해부터 채탄량을 1천35만t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
 - 이 업체가 대규모 증설에 나선 이유는 중국이 부두 사용권을 확보한 라진항이 올해부터 본격 가동돼 생산한 석탄을 남방지역으로 대량 운송할 길이 열리기 때문
- **김정일 '마지막 현지도' 北대형마트 개업(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현지도한 대형마트 '광복지구 상업중심'이 5일 개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이날 개업식 소식을 전하며 "모든 경영활동의 정보화, 숫자화(디지털화)가 실현된 상업중심에는 가정용품, 전자제품, 식료품, 섬유 잡화 등이 채워진 매장들이 갖춰짐으로써 인민들이 자기들의 기호와 요구에 맞는 갖가지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LED 자동조명등 평양주민에 인기(1/6, 조선신보)**
 - 소리와 빛으로 작동하는 LED(발광다이오드) 자동조명등이 평양주민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6일 보도
 - 조선신보는 이날 'LED 자동조명등 호평'이라는 기사에서 "소리와 빛을 수감(인식)해 자동적으로 개폐되는 조명등이 평양 제1백화점을 비롯한 여러 상점에서 호평 속에 판매되고 있다"고 전함.
- **유엔, 北영양실조 아동 긴급지원(1/6, 미국의 소리(VOA))**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이 북한의 중증 영양실조 어린이를 지원하기 위해 유엔아동기금(UNICEF)에 42만7천 달러를 긴급 제공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전함.
 - CERF는 몇 달 동안 북한에서 식량안보가 취약한 지역에 영양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아동 영양실조가 심화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소개
 - UNICEF는 CERF가 제공한 이 자금으로 1월부터 3월까지 북한의 중증



영양실조 아동 치유, 필수약품 조달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유니세프의 제프리 킬리 아시아 대변인은 "함경남북도와 량강도, 강원도 내 25개 군의 중증 영양실조 어린이들이 영양강화 우유와 고단백 비스킷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함.

● 北 "합리적 세무조사"...투자유치 인간힘(1/8, 연합뉴스)

- 나진·선봉과 황금평 등 경제특구에 적용할 법률을 속속 내놓고 있는 북한이 최근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유의사항'을 내놓아 눈길을 끄.
- 8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북한의 '사회과학원 학보 4호'(2011년 11월 발간)에 실린 '특구경제지대에서의 세무조사 사업을 개선하는 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라는 논문은 특구 관리를 위한 세무조사에 대한 정책적 조언을 담고 있음.
- 논문은 "경제강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와의 경제거래를 확대·발전시켜나가는 우리의 주동적이고 성의있는 노력에 의해 여러 형태의 특수경제지대가 창설·운영되고 있는 현실은 세무조사사업을 개선해 나갈 것을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역설했음.

● 北 리철 합영투자위원장 교체(1/8, 연합뉴스)

- 북한의 투자유치 창구인 합영투자위원회의 리철(李徹 75) 위원장이 교체된 것으로 연합뉴스가 8일 전함.
- 8일 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최근 북한 합영투자위원회의 리철 위원장이 물러나고 이광근(李光根) 전 무역상이 후임으로 임명됐고, 합영투자위원장 교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직접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통일부가 펴낸 '북한의 주요인물' 책자에 따르면 신임 이광근 위원장은 1953년생으로 김일성종합대 독일어과를 졸업하고 외교관으로 일하다 무역 실무에 뛰어든 인물이며, 이 위원장은 1990년대에 평양 종합설비 수출입회사, 은별무역회사 등을 경영한 경험이 있음.



■ 기타 (대내 경제)

- 김만수(전력공업성 부상) 및 최광래(국가품질감독위원장) · 황수일(석탄공업성 국장) · 리명훈(군관) 등, '새해 공동시설 과업 관철 결의' 반향(1.2, 중방)
- 제3차 평양제1백화점 상품전시회 개막식, 1.3 이무영(내각부총리/개막사), 김봉철(상업상) 등 참가下 진행(1.3, 중통)
- 인민경제 선행부문인 전력, 석탄, 금속, 화학공업 부문 노동계급, "공동시설 관철과 김일성민족의 새로운 100년대를 빛내일 열의에 넘쳐있다"며 '2012년 강성대국 대진군' 독려(1.4, 중통/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떠밀어 갈 드높은 열의)
- 北 환경공학연구소, 불에 타지 않는 '방화천' 새로 개발(1.4, 중통)
- 北 '광복지구상업중심'(11.12.15, 김정일父子 현지지도) 개업식, 1.5 오룡일(조선대성무역총상사 총사장/연설) · '쉬에르페이'(중국 비해몽신무역유한공사 집행동 사장/연설) 등 참가下 진행(1.5, 중통 · 중방)
- "김정일동지의 혁명업적과 유훈은 영원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생명선, 만년재보"라며 '농업발전 · 평양 면모일신 · 대외정책이념' 등 '北 새해 공동시설'에 지적된 사안 강조(1.5, 중통/조선인민의 영원한 생명선 · 농업발전에 힘을 넣고 있는 조선 ·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가는 조선 · 공화국의 일관한 대외정책리념)
- 8.28청년돌격대관리국 운수기동여단 돌격대원들의 만수대지구 건설 성과 및 평양기초식품공장 개건공사 박차 보도(1.8, 중방)

다. 군사

● 김정은 첫 방문 부대 사단장 계급은 '강등'(1/8,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첫 공식활동으로 지난 1일 방문한 '근위서울류경수 제105탱크사단'의 사단장 계급이 강등된 것으로 8일 확인
- 지난해 1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 부대를 시찰할 당시 김 사단장은 별이 3개인 상장(우리의 중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으나, 지난 2일 조선중앙통신이 송고한 김정은 부위원장 옆에 서 있는 이 부대 김송철 사단장은 계급장에 별이 2개 달린 중장(우리의 소장)이었음.
- 김 사단장이 계급만 강등된 채 사단장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미뤄 개인 비리보다는 부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 등으로 연대책임을 졌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추정됨.

라. 사회 · 문화

● 김정은 '탈북자 농치지 말라' 엄명 (1/4, 산케이신문)

-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된 김정은이 직할 치안부대에 탈북자를 철저히 단



- 속하라는 엄명을 내렸다고 산케이신문이 4일 보도
 -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의 정보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이 발표된 작년 12월 19일을 전후해 "탈북자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전함.
 - 소식통에 의하면 김정은의 탈북자 저지 명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발표를 전후해 특수치안기관인 '조선인민군 내무군' 간부에게 전달
- **'김정은 시대' 개막 이후 北서 뜨는 노래, '발걸음'이여 '조선청년행진곡' 새 찬양가로 부상 (1/5, 조선중앙통신)**
 - 해방 직후 지어진 노래 한 곡이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북한 매체들이 선전하고 있으며, 노래의 제목은 '조선청년행진곡'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전함.
 - '선군조선의 영원한 청춘찬가'라는 글에서 "조선청년 속에서 널리 불리는 노래들 중에는 가요 '조선청년행진곡'(김련호 작사·김원균 작곡)도 있다"며 "이 노래는 주체 36년(1947년) 창작됐다"고 소개
- **北, 시인 차영도에 '김일성 훈장' 수여, 성악가 리향숙 인민배우 칭호(1/6, 조선중앙방송)**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정령'을 통해 차영도 시인에게 '김일성 훈장'을 수여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6일 보도
 - 차영도 시인은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시 분과위원회 위원장(연도미상)을 역임한 바 있으며 주요 작품으로 '길이 받들자, 우리의 태양(시)', '승리의 길'(가사), '최고사령부에 눈이 내리네'(작사),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작사) 등이 있음.
 - 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성악가 리향숙에게도 '인민배우' 칭호를 수여
- **"2009년 北-美 전화통화 17만 건"(1/6, 자유아시아방송(RFA))**
 - 2009년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뤄진 전화통화가 총 1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
 - 방송이 입수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2009년 국제통신자료'에 따르면 2009년 양국 간에 오간 전화통화는 총 17만건, 통화시간은 약 82만 분이었으며, 전화통화는 미국에서 북한으로 건 경우가 78만 분이었고, 그 반대는 4만분이었고, 2009년 총 통화시간은 2008년(10만5천분)과 비교하면 7배 이상 늘었음.
- **<북한단신> '공동시설' 선전화 전람회 개막(1/6, 조선중앙통신)**
 -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 당 구호, 신년 공동시설을 관철하기 위한 선전화 전람회가 6일 평양 국제문화회관에서 막을 올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전람회에는 만수대창작사와 중앙미술창작사, 철도성미술창작사, 평양미술대학이 창작한 선전화 80여점이 전시



● **北 김용진 교육위원장 부총리 승진(1/6,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교육수장인 김용진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내각 부총리로 승진한 것으로 조선중앙방송이 6일 확인
- 조선중앙방송은 전날 노동당 정치국 결정서와 당 구호, 신년 공동사설 관철 체육부문 일꾼과 체육인의 결의대회 소식을 전하면서 행사에 참석한 김용진 위원장을 '내각 부총리'로 소개했음.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黨 정치국 결정서·공동구호·공동사설 관철 및 咸南道 근로자들의 편지에 호응하는 '노동계급·직맹원들의 결의대회', 1.5 현상주(「직총」위원장/보고)·리영수(黨 부장) 등 참가下 남포시에서 진행(1.5, 중통)
- 2012년 은하수 신년음악회 '태양의 위업 영원하리', 1.5 黨 중앙위원회 일꾼들·各道黨 책임비서 등 관람下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1.5, 중통)
- 최고인민회의 '정령 제2074호'(11.12.21字), 평양곡산공장 당가류직장 등 12개 단위들에 '2중26호모범기대영예상' 수여(1.5, 중방)
- 최고인민회의 '정령 제2023·2024호'(11.12.7字), 차영도(은하수 10월 음악회 '영원히 한길로 가리라' 창작)·리향숙(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강좌장)에게 '김일성훈장·인민배우칭호' 추증 수여(1.6, 중통·중방)

2. 대외정세

가. 일반

● **北, "도덕적 미숙아" 일본도 조문관련 맹비난(1/3, 조선중앙통신)**

- '대국상을 당한 조선민족의 가슴에 칼질을 한 일본의 도덕적 미숙아들'이라는 논평에서 "이웃나라의 대국상을 같이 슬퍼하고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한민족 성원의 조문길까지 가로막아 나선 일본당국의 책임은 무지막지하기 그지없는 비열한 행위"라고 조선중앙통신 3일 보도
- 일본은 김 위원장 사망소식이 발표된 지난달 19일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을 통해 애도의 뜻을 밝혔지만, 조총련 간부들의 조문 박복은 불허한바 있음.

● **미, 북한 내 미군유해 발굴 예정대로 추진(1/4, 미국의소리(VOA))**

- 미국과 북한이 올해 재개하기로 합의한 북한지역 내 미군유해 발굴작업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계없이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미국의소리



- 리(VOA) 방송이 4일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
 - 방송에 따르면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 담당국' 캐리 파커 공보관은 지난 3일 이 방송과 통화에서 김 위원장 사망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유해발굴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함.
- **中 외교부 "북중, 정상적 경제·무역 거래"(1/5,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5일 "중국과 조선(북한) 사이에는 정상적인 경제·무역 거래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홍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북한에 사치품을 수출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관련 거래는 어떠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도 위반하지 않았고 중국은 관련 결의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그같이 밝혔다.
- **日서 김정남 인터뷰 담은 책 출간 예정(1/6)**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과 일본 언론인이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인터뷰 등을 모은 책이 이달 20일 일본에서 출간된다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
 - 일본 문예춘추사가 펴낼 이 일본어 서적의 제목은 '아버지 김정일과 나'이며, 이 책은 김정남과 고미 요지(五味洋治) 도쿄신문 편집위원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 김정남은 김 위원장의 장례가 끝난 뒤인 이달 들어 보낸 이메일에서 3대 세습을 비판했고, 후계자로 부상한 동생 김정은에 대해 "젊은 후계자를 상징적으로 내세워놓고, 기존의 파워 그룹이 (권력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추측한 것으로 전해졌음.
 - 김정남은 김 위원장에 대해 "엄격하고 정이 깊었다"고 표현했고, 김 위원장이 예전에 "자식에게 권력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소개
- **북한 사치품 유입 지난 5년간 대폭 늘어(1/8, 월스트리트저널)**
 - 유엔의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북한의 사치품 수입이 크게 늘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
 - WSJ이 유엔 자료와 중국의 무역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북한의 자동차와 랩톱 컴퓨터, 에어컨 수입량은 4배로 증가
 - 특히 휴대전화 수입은 43배로 뛰었음.
- **北 김정은 체제, 美에 식량 지원 요청(1/8, 교도통신, 아사히신문)**
 -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인 김정은 체제가 처음으로 미국에 식량 지원을 요청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
 - 8일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의 주요 언론에 의하면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결식이 있었던 작년 12월 말 미국과 식량 지원과 관련한 협상을 재개해 지원 품목의 변경을 요구
 - 북한은 유엔 대표부를 통해 미국에 분유, 비스킷 등의 영양 보조식품



대신 쌀과 옥수수 등 곡물의 비중을 늘려달라고 요청했고, 북한이 김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미국과 직접 협의에 나선 것은 처음임.

● **北, 日에 표류 북한인 송환 요구(1/9, 일본 교도통신)**

- 북한이 일본에 표류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3명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9일 보도
- 지난 7일 베이징 대사관을 통해 일본 측에 이같이 요구했으며, 북한 남성 3명을 태운 목선이 일본 시마네현 앞바다에 표류해간 사실이 지난 6일 알려지자 그 다음날 바로 귀환을 요청
- 일본 정부는 내부적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한 끝에 인도적인 측면에서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북한으로 돌려보낼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르면 9일 북한과 비공식 협의를 할 예정

■ **기타 (대외 일반)**

- 김정일 위원장 사망 관련 日 정부의 "애도의 뜻 표할 예정 없다"는 발언 및 조총련 간부 訪北 不許 등 관련 "비열한 행위, 도덕적 미숙 아들만의 너절하고 가소로운 추태"라고 비난하며 "끝까지 계산할 것"이라고 위협(1.3, 중통/대국상을 당한 조선민족의 가슴에 칼질을 한 일본의 도덕적 미숙아들//1.4,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용납 못할 정치패륜행위)
- 美 '캠벨'(국무부 東亞-太 차관보)의 中韓日 巡訪 등 유관국들의 김정일 死後 '北 불안정화' 가능성 언급 및 협의 관련 "불안정 요인은 조선밖에 있다"며 '韓美 움직임' 비난 및 '北 국방총 성명' 再강조(1.8, 조선신보/호전세력의 언동 주시하는 평양시민들)

나. 6자회담(북핵)

● **北 "침략책동 계속되면 핵보유국 지위 더 강화"(1/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우리는 원수들의 침략 책동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
- '서기국 보도'를 통해 핵 활동 중지를 요구한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2일 신년 국정연설을 '희떠운 망발'이라고 비난하면서 "세계가 공인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당당한 핵보유국이고 핵 억제력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혁명유산"이라며 이같이 강조
- 조평통은 이 대통령을 '역도'로 지칭하면서 "핵 활동 중지와 지원을 지킬 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핵 억제력을) 그 무슨 지원 따위로 흥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오산"이라고 주장



3. 대남정세

- **南언론·인터넷서 김정은 경모열풍?(1/5, 우리민족끼리)**
 - 새해 벽두부터 '김정은 띄우기'에 주력하고 있는 북한이 이번에는 남한 언론매체들까지 '김정은 칭송'에 나섰다고 선전
 -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5일 '매혹이 터치는 칭송의 메아리'라는 글에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천출위인'이라고 찬양하며 남한 언론도 '사상이론의 천재' 등으로 흠모하고 있다고 주장
- **北 대남비난 초점 '조문→대북정책' 확대(1/6, 우리민족끼리)**
 -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4일 '계산밖에 없다'는 글에서 "남조선 역적패당은 우리 대국상을 기회로 '급변사태'를 운운하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결과 전쟁 분위기를 고취했다"고 주장
 - 같은 날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은 상보를 통해 김 위원장 사망 보도 이후 우리 정부가 취한 경계태세, 제한적인 조의 표시 및 조문 허용,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맹비난
 - 북한이 새해 들어 연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당국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대남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비난의 초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서 대북정책으로 그 대상을 넓히는 양상임.
 - 지난달 30일 북한의 국방위원회는 성명에서 김 위원장 사망 이후 보여준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와 조문 제한 등을 강도높게 비난하며 더이상 이명박 정부와 상종하지 않겠다고 밝혔음.
- **北, 남측 범민련 간부 법정구속 비난(1/6, 조선중앙통신)**
 -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북측본부는 6일 우리 법원이 남측본부 간부 2명을 법정구속한 것을 '용납못할 망동'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범민련 북측본부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을 비롯한 통일애국인사들을 추모기간에 법정에서 끌어내어 악형을 들씌우는 것은 결국 동족의 아픈 가슴에 칼을 박는 천추에 용납못할 망동이 아닐 수 없다"고 밝힘.
- **北, 주한미군 철수 거듭 주장(1/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6일 주한미군을 한반도 평화의 장애물로 비난하며 철수를 거듭 요구
 -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기본 장애물 미제침략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 신년 공동사설을 언급하고 "진정으로 미국이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정전협정



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하며 남조선 강점 미군을 지체없이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 6일 보도

- 이어 "미군이 철수하면 조선반도에는 그 어떤 안보 위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깃들 것이며 통일의 넓은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하고, "미국은 대화에 대해 운운하고 있지만 남조선에서 광란적인 북침전쟁연습을 해마다 벌이고 있으며 첨단살인장비들을 끌어들이며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공격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고 비난

● **김정은 생일에 개성공단 특근을 '뚝'(1/8, 연합뉴스)**

-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생일인 8일을 앞두고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들에게 특근을 시키지 않도록 기업체들에 요청했다고 통일부가 전함.
-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 6일 북측이 개별 업체별로 '이번주 일요일에는 특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왔다"며 "이에 따라 개성공단은 전체적으로 특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그러나 북측의 요청에 따라 평소 일요일보다 줄었지만 특근을 한 업체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기타 (대남)

- 李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관련 민주통합당 대변인 성명을 인용 "체질적 동족거부감과 반공화국대결에 매달려 잔명을 부지해가는 현 보수집권패당에게 더는 기대할 것도, 바랄 것도 없다"고 비난(1.3, 우리민족끼리/깊은 절망감을 안겨준 망언)
- 김정일 위원장 사망에 대한 南 정부의 대응(비상경계령·조문제한·전단지 살포 등)에 대해 "하늘을 거역한자 천벌을 면치 못한다"며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파멸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실명거론 지속 비난(1.3, 중방/동족의 대국상에 칼질을 한 이00 패당의 죄행을 반드시 계산할 것이다)
- "올해는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 발표 5돌'이 되는 해" 강조 및 "민족자주 원칙에서 통일문제 해결, 南 보수패당의 사대매국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전환기를 마련하기 위한 대중적 투쟁" 선동(1.4, 노동신문/은 겨레가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자, 우리민족끼리/민족자주, 민족우선의 입장을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
- 北 「조평통」 서기국, 李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1.2) 對北제의(남북관계 및 北核활동 중지와 지원)에 대해 "파렴치한 궤변, 희떠운 망발"이라고 왜곡 및 "핵보유국 지위 더욱더 강화" 강조 '보도 제 989호' 발표(1.5, 중통)
- 統一部の '신년업무보고'(통일정책 3대목표와 8대중점추진과제) 관련 "李○○ 역도의 反통일각본들을 그대로 옮긴 흡수통일정책의 복사판에 불과, 南北관계를 끝장낸 자들의 기만용 궤변"이라고 비난(1.8, 우리민족끼리/흡수통일을 노린 3대목표)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美 캠�벨, 中과 '포스트 김정일' 논의(1/4)

- 미국의 한반도 정책 실무 책임자인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4일 베이징(北京)에서 중국 외교부의 장즈쥘(張志軍), 추이텐카이(崔天凱) 부부장과 면담했음. 지난 3일 밤 베이징에 도착한 캠�벨 차관보는 이날 오후 장 상무부부장과 추이 부부장을 별도로 만난 것으로 전해졌음.
- 캠�벨 차관보는 이들을 만난 뒤 "미중 양국 간에 앞으로 수 개월간 긴밀한 접촉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북한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한편 모든 당사국들이 상황을 주의 깊게 다루고 어떠한 도발도 자제하도록 촉구했음을 강조했다"고 말했음. 캠�벨 차관보는 중국 측으로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의 북한 사정 등에 대해 전해 듣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추정됨.
- 캠�벨 차관보는 미국 고위관리로서는 처음으로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중국을 방문했음. 캠�벨 차관보는 두세 달에 한 차례 중국을 방문하며 이번에도 김 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파악하려는 차원에서 순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장 상무부부장은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부장을 빼고 외교부 내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수석부부장(차관)이고 추이 부부장은 미국과 중국 간에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사무협상의 카운터파트임.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캠�벨 차관보가 중국 측에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 의지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캠�벨 차관보는 아울러 중국 측과 미얀마 문제와 관련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을 것으로 관측됨. 캠�벨 차관보는 중국 방문에 이어 이날 저녁 2박3일 일정의 한국 방문 길에 오름. 방한 기간에는 외교통상부 김재신 차관보와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만날 예정임

● 美 "남북관계 개선, 6자 재개 기준 중 하나"(1/4)

- 미국은 3일(현지시간)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개선이 6자회담 재개 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최근 대남비난 공세 강화가 향후 북한과의 추가 미북회담 전망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6자회담으로 되돌아가는 문제와 관련해 특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2가지 기준(criteria)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그는 "이중 한 가지는 남북 간의 지속적인 관계 개선이며, 다른 한 가지



는 국제의무와 2005년에 한 약속을 준수하겠다는 북한의 약속과 의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들 두 개(기준) 모두가 테이블에 놓여 있다"면서 "우리의 입장은 확실히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대남비난 공세 강화 입장이 "(협상)테이블로 우리가 되돌아가게 하는데 좋은 것은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언급은 북한이 지난달 30일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김정일 사망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과 조문 제한 등을 강하게 비난하며 이명박 정부와 상종하지 않겠다고 밝힌데 대한 첫 공식 입장임.

- 미국 정부의 이런 입장은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미북회담이나 6자회담 재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됨. 놀런드 대변인은 미북 3차회담 전망과 관련한 질문에 "북측으로부터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지난해 말 상태에서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 한덕수 "美, 3차 미북대화 조기개최 희망"(1/5)

- 한덕수 주미한국대사는 4일(현지시간) "6자회담에 가기 전에 북한이 행동으로서 해 주기를 바라는 사전 조치들이 있다"면서 "6자회담 참여국들은 하루 빨리 3차 미북회담이 열려서 그런 사전 조치들이 타결되고, 그것을 기초로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모두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 대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3차 미북회담을 미국도 조기에 개최하길 원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1월중 3차 미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은 얘기하기 어렵다"면서 "북한이 얼마나 빨리 안정이 되고 그런 정책을 끌고 나가느냐는 것은 북한에 달려있다"고 답했다.
- 그는 "북한의 대외정책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무엇이 바람직한 남북관계이고 북한이 어떤 일을 해줘야 한반도와 세계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가 하는 메시지를 꾸준하고 명확하게 북한에 전달해 북한의 새로운 리더십이 그런 쪽으로 같이 힘을 합쳐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 한 대사는 이란제재법 발효에 따른 한국의 이란산 원유수입 중단 문제와 관련, "국제적으로 볼 때 이란의 핵문제는 북한의 핵문제만큼 중요한 문제"라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란으로부터 들어오는 원유의 양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다른 나라로 수입선을 돌릴 수 있는 여지는 얼마나 되는지 열심히 검토해 나가면서 동시에 미국과는 제재 규정이 한국에 대해서는 좀 더 완화된 형태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 약간의 고통이 따르긴 하지만 우리가 북한에 대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국제사회가 제재에 참여하도록 요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란 핵프로그램의 저지를 위해 우리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적극 참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음.

- 한 대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과정의 최대 쟁점이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 재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협정이 정식 발효 되면 90일 이내에 서비스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다"면서 "거기에서 ISD에 대한 우리의 걱정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과 경제적인 동맹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인도를 매우 올리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 모두가 좀 더 이해를 해 주시고 협정이 요구하는 여러 우리 제도의 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캠프 "北, 남북관계 개선 나서야"(종합)(1/5)

-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5일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밝혔다. 캠벨 차관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면담한 뒤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통해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캠벨 차관보는 이어 "미국의 모든 북한 관련 부처와 관계자들은 북한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면서도 3차 북미대화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특별히 대답할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음.
- 그는 대신 "한미 양국은 굳건한 동맹에 기반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비핵화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확보하며 북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부 장관을 대신해 김성환 외교부 장관을 워싱턴으로 초청한다"면서 조만간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것임을 시사했음. 그는 또 "내일 일본을 방문해 북한 문제를 포함한 각종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한미일 3각공조는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워싱턴에서 한미일 3자회담이 이뤄지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3자회담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열릴 것으로 전해졌음.
- 캠벨 차관보는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한 결과를 우리 정부 당국자들에게 사후설명(디브리핑)했다면서 "북한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와 긴밀히 협의해야 하며, 북한에 자제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중국 측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사실상 이란산 원유 금수를 의미하는 국방수권법의 적용 대상에서 한국을 빼줄 것을 미국 정부에 공식 요청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새로운 법안이 한국 내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을 이해한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캠벨 차관보는 이날 김 장관 면담에 앞서 김재신 차관보, 임성남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등과 만나 향후 대북정책을 조율했으며, 약식 기자회견 뒤에는 류우익 통일부 장관과 면담했음. 캠벨 차관보는 오는 6일 일본



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 <한미, 中통해 6자회담 재개 모색>(종합)(1/5)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중단된 6자 회담 재개 흐름을 되살리기 위해 한미가 중국을 통해 북한에 대화의 문을 다시 열 것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특히 그동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공조해온 한미가 김 위원장 사후에는 '선(先) 중국 방문 후(後) 양자협약'의 수순으로 대화를 이어가면서 공조의 포인트를 '중국'에 맞추고 있다는 분석임.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5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우리측 6자회담 수석 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3차 북미대화과 6자회담 재개 등 후속 대화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두 사람은 이번 만남을 통해 비핵화 대화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와야 한다는데 한미간 이견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됨. 이는 북한이 비핵화 사전조치 수용 등의 전향적 자세로 임하면 언제든지 대화 재개가 가능하다는 뜻임. 앞서 캠벨 차관보는 3~4일 중국을 방문, 중국 외교부의 2인자인 장즈쥘(張志軍) 상무부부장 등과 면담했음. 그는 중국으로부터 김 국방위원장 사망 후의 북한 사정 등에 대해 전해 듣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 김 위원장 사망 직후인 지난달에는 임 본부장이 중국을 방문한 뒤 미국을 찾았음. 지난달 22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중국측 6자 회담 수석 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만나 6자 회담 재개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한 임 본부장은 같은 달 27일 글린 데이비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만난 뒤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과정이 재개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미국측과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 한미의 이런 움직임은 현 국면에서 중국이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중국을 통해 신호를 보내는 것임. 여기에는 후속 대화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각국 정치 일정 등의 이유로 재개 동력이 약화될 것이란 고민도 반영된 것으로 보임. 김 위원장 사망 직전까지 북미간 비핵화 사전 조치에 대한 협의를 상당히 진전시켰는데 이런 노력이 자칫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인 셈임.
- 임 본부장이 다음 주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국민 방문을 이례적으로 수행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보임. 정부 소식통은 "중국이 좀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때"라면서 "한미가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평가하고 후속대화를 위한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면 중국도 이에 대해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 <美 "한반도와 중동 동시위협 대처 능력있다">(1/6)

- 미국이 5일(현지시간) 내놓은 새로운 국방전략은 한반도 안보환경에도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 미국은 일단 새 국방전략 발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안보와 한미동맹에는 어떤 변화도 없을 것임을 우리측에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도 이날 펜타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위협에 직면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위협들에 대처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새 군사전략 발표가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그대로"라고 말했다. 현재 2만8천500여명인 주한미군 수준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음.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패네타 국방장관이 이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 역할을 강화할 것이며, 중요한 지역을 희생하면서 국방비 삭감을 추진할 수는 없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함.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주둔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밝혀왔음. 또 새 국방전략 발표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도 별다른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군을 보다 슬림화하지만 세계 최강군으로서의 새로운 국방전략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2만8천500여명인 주한미군 수준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음.
- 그러나 향후 10년간 4천억~1조 달러의 국방예산 삭감 위기에 놓인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따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은 있음. 일단 한미 양국은 2013년까지의 방위비 분담금에는 이미 합의해 둔 상태임. 그렇기 때문에 2013년 이후 양국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시 미국이 우리에게 더 큰 부담을 요구할 개연성은 있음. 이미 미국은 정부 관계자들과 전직 관료,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자협력 대화에서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새로운 국방전략이 북한에 줄 수 있는 영향임. 전문가들은 '두 개의 전쟁' 수행 전략을 사실상 포기한 이번 전략으로 당장 북한의 '자신감'을 높여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사시 한반도에 대규모 미군 증원병력을 파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작계 5027'의 수정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지만 이는 너무 나간 분석이라고 워싱턴 소식통들은 전했다. 한 소식통은 "기존의 작계를 수정할 정도는 전혀 아니다"라면서 "작계의 수정을 요구할 상황이었다면 이미 한미 간에 상당한 협의를 벌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미·북 관계

● <美, 활발한 '北 관리외교'..북한 반응 주목>(1/2)

- 미국이 임진년 새해벽두부터 활발한 '북한 관리외교' 행보를 과시하고 있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전에 사실상 합의 직전까지 갔던 북미간 협의 내용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도 유효한 것인지를 확인하려



- 는 의지가 역력함. "공은 북한 쪽에 가 있다"(지난달 29일 놀랜드 국무부 대변인)며 김정일 애도기간을 끝낸 북한을 향해 '가급적 빨리 입장을 밝히라'고 재촉하는 모양새임.
- 식량(영양)지원과 우리농 농축프로그램 일시 중단을 포함, 비핵화 조치 이행을 고리로 한 북미간 '합의'는 올해 대선을 앞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북한 핵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한반도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북한을 관리하려면 협상태이블로 그들을 견인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압혀진다는 얘기임.
 - 미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 실무 책임자인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3일부터 중국과 한국, 일본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주목됨. 캠벨 차관보는 김정일 사후 북한과 사실상 유일하게 소통하고 있는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김정은 체제'를 집중 탐색할 것으로 보임. 또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재개를 바라는 미국 정부의 메시지도 중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에 전달하는 효과도 노릴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한국정부를 향한 비난공세를 높이면 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을 중시하고 있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전언임. 이번 사설이 향후 김정은 체제가 지향할 대외정책 노선의 골자를 제시한 것이라면 일단 '강한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강함.
 - 또 '김정일의 유지'를 강조하면서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최우선으로 제시한 것은 미국으로부터 식량(영양) 지원을 받아야 하는 북한의 현 상황을 말해주는 대목으로 해석될 수 있음. 워싱턴포스트(WP)는 1일(현지시간) 북한이 우리농축 프로그램 중단을 대가로 24만에 달하는 식량지원을 받는 협상이 거의 타결 직전까지 갔었지만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상황이 유동적으로 뒤편으로 전했다고 전했다.
 -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캠벨 차관보가 동아시아 순방을 통해 확보한 최신 북한내부의 동향과 정책방향, 그리고 6자회담 관련국들의 행보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대북 정책의 방향을 정리할 것으로 보임. 특히 김정일 위원장 사망 발표 다음날 가동한 뉴욕 채널을 통해 북한이 전해올 메시지를 주시하고 있음. 미국이 요구한 비핵화 사전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경우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연기된 북미 대화가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이 큼. 대화의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국이 6자회담 조기재개를 서두를 경우 북핵 문제는 다시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각될 수 있음.
 - 그러나 내부안정이 급선무가 될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상당기간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북한이 수세적인 입장이 되면 핵문제와 북미대화는 긴 호흡에서 지켜봐야할 상황이 될 수 있음. 자칫 그 과정에서 북한 내부의 동요를 막기 위한 강경파의 도발이 감행되면 한반도 정세는 일순간 위기국면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음. 미국이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시나리오임. 게다가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 동맹의 가치를 워낙 강조하는 입



장이어서 향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6자회담의 선순환 고리를 유지하는 문제가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현지 외교소식통은 1일 "대북 정책을 포함한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통해 골자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 이전에 뉴욕 채널이 가동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北, 주한미군 철수 거듭 주장(1/6)

- 북한은 6일 주한미군을 한반도 평화의 장애물로 비난하며 철수를 거듭 요구했음. 조선중앙통신은 6일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기본 장애물 미제침략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 신년 공동사설을 언급하고 "진정으로 미국이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비한다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하며 남조선 강점 미군을 지체없이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은 이어 "미군이 철수하면 조선반도에는 그 어떤 안보 위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깃들 것이며 통일의 넓은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 "미국은 대화에 대해 운운하고 있지만 남조선에서 광란적인 북침전쟁 연습을 해마다 벌이고 있으며 첨단살인장비들을 끌어들이며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공격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고 비난했음. 북한은 지난 1일 노동신문(당보), 조선인민군(군보), 청년전위(청년보)에 게재한 공동사설에서 4년 만에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했다.

● "北 김정은 체제, 美에 식량 지원 요청"(종합)(1/8)

-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인 김정은 체제가 처음으로 미국에 식량 지원을 요청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음. 8일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의 주요 언론에 의하면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결식이 있었던 작년 12월 말 미국과 식량 지원과 관련한 협상을 재개해 지원 품목의 변경을 요구했음.
- 북한은 유엔 대표부를 통해 미국에 분유, 비스킷 등의 영양 보조식품 대신 쌀과 옥수수 등 곡물의 비중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음. 북한이 김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미국과 직접 협의에 나선 것은 처음임. 이는 미국이 작년 12월 중순 베이징 북미 협의 당시 북한이 지원 식량을 군용으로 전용할 것을 우려해 영양 보조식품만을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품목의 변경을 요구한 것임. 북한은 "저장이 쉽고, 광범위한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음.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거부하고 영양 보조식품으로 한정된 기존 입장을 고수했으나 재협의를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해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겼음.
-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이는 김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중단됐던 북한의 대미 외교가 재시동한 것으로, 향후 핵 문제를 포함한 북미 접촉이 활발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음. 요미우리신문은 "북한이 곡물 지원을 요청한 것은 식량 사정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체제의 안정을 위해 주민에게 배풀 특별 식량배급의 필요성에 쫓기고 있기 때문"이라



고 분석했음. 미국은 작년 12월 15~16일 북한과의 베이징 협의 때 유아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분유와 비스킷, 비타민 등 영양 보조식품을 매월 2만t, 1년간 24만t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었음. 당시 식량협회는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고위급 대화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음.

● 北, 美에 "영양지원 규모 늘려달라" 요구(1/8)

- 북한이 미국에 대해 대북 영양지원 규모를 당초 24만t보다 크게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음. 또 영양(nutrition)제품 이외에 쌀 등 알곡(grain)도 함께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음. 북수의 대북 소식통은 8일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추도기간이 끝나기 전인 지난달 말 뉴욕채널을 통해 대북 영양지원 규모를 늘려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양지원 뿐만 아니라 알곡도 포함시켜 달라고 했다"고 말했음. 북한은 당초 24만t보다 늘어난 30만t 가까이 지원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음. 이에 대해 미국은 지원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음.
- 미국은 그동안 2008년 북한에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식량 50만t 가운데 미집행된 33만t 내에서 대북 지원규모를 검토해왔음. 미국은 그러나 알곡 지원의 경우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데다 영양제품에도 일정량의 알곡이 포함돼있는 점을 내세워 불가하다는 입장을 북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음.
-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2월28일께 뉴욕채널을 통해 미국에 쌀을 포함한 식량지원을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절하고 영양지원만을 제공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고 소식통들이 밝혔음.
- 정부 소식통은 "북측의 요구가 지난달 16일 북미의 식량지원 협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새롭게 정리된 북측의 요구인지, 또 현장 실무자들의 제안인지 알기 어렵다"면서 "상황을 더 지켜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음. 북미 양국은 김정일 사망 이전 북한이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에 동의하고 미국은 매달 2만t씩, 총 24만t의 영양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음.

다. 중·북 관계

● 中 매체, 北 김정은 동정 집중 보도(1/2)

- 중국 관영매체들이 2일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북한 '최고 영도자'로 거론하면서 동정을 집중적으로 소개했음. 신화통신은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자 당·국가·군대의 최고 영도자인 김 부위원장이 1일 '105 탱크부대'를 방문했다고 전했음. 김 부위원장의 부대시찰은 최고사령관 추대 이후 첫 군부대 방문이라고 덧붙였다.
- 같은 날 조선중앙통신은 김 부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근위서울류경수 제 105탱크사단'을 방문했다고 썼고 신화통신도 이를 인용해서 보도했음.



- 신화통신은 또 김 부위원장이 새해 첫날 당·정·군 인사들을 이끌고 금수산기념궁을 찾아 조부와 부친을 참배했다고 소개했음.
-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신화통신과 마찬가지로 김 부위원장에 대해 최고사령관 겸 당·국가·군대의 최고 영도자라는 수식어를 사용해 눈길을 끌었음. 인민일보는 김 부위원장이 105 탱크부대 방문에 이어 금수산기념궁을 찾았다고 전했다.
 -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김 부위원장이 첫 군부대 시찰에서 "105 탱크부대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가장 많이 찾았던 군부대"라며 "최고의 전투력을 갖추기 위해 훈련을 더 강화해 유사시 전투에 준비하고 인민군의 모범이 돼 달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음. 중국신문사는 아울러 북한이 새해 첫날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등 3개 신문 공동사설을 통해 '김정은 영도 지위를 강조했다'고 강조했다.
 - 바이두, 쿠파닷컴 등 중국의 주요 포털사이트도 북한 관영매체들의 신년 사설을 전하고 김정은 부위원장의 첫 군부대 시찰 소식을 소개했음.

● <中매체 南北정상 신년동정 보도, 여전히 北 먼저>(1/3)

- 중국 매체들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후에도 예전처럼 남북한 소식을 다룰 때 북한을 앞자리에 놓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 국영 중국중앙(CC)TV는 2일 밤 메인 뉴스 프로그램 '신원론편(新聞聯播)'을 통해 북한의 새 최고 지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동정을 연이어 보도했음.
- CCTV는 먼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자 조선(북한) 당·국가의 최고 영도자'인 김 부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근위서울류경수 제105탱크사단'을 시찰했다고 전했다. CCTV는 김 부위원장이 105사단은 김일성 주석과 김 위원장이 가장 많이 찾은 부대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최고의 전투력을 유지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CCTV는 김 부위원장 동정 보도에 이어 이 대통령의 신년 특별 국정 연설 소식을 보도했음. CCTV는 이 대통령이 현재 중요한 목표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한 기회의 창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음. CCTV는 이어 이 대통령이 북한이 핵 활동을 중단해야만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 마찬가지로 반관영 통신 중국신문사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김 부위원장이 신년 음악회를 관람했다는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 그 뒤에 이 대통령의 신년 국정 연설 소식을 다뤘음. 중국 매체들이 이처럼 남북한을 열거할 때 늘 북한을 앞자리에 놓는 것은 중국과 북한의 특수한 '혈맹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임. 중국인들도 지리적인 방향을 가리길 때는 '남북'이라고 쓰고 있고 외교부 또한 남북한을 통칭해 가리킬 때는 '남북 쌍방'이라고 씀.

● <中언론 '김정은 부각 보도' 노림수는>(1/3)



- 중국의 주요 매체들이 3일에도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북한의 새 지도자로 '각인' 시키는 데 주력했음. 관영 신화통신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국영 CCTV 등은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중앙방송을 인용해 김 부위원장이 당·정·군 간부와 은하수 신년음악회 '태양의 위업 영원하리'를 관람했다고 전했음. 이들 매체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김 부위원장에 대해 최고사령관 겸 당·국가·군대의 최고 영도자라는 수식어를 사용해 눈길을 끌었음. 2일에는 김 부위원장이 임진년 새해를 맞아 '105 탱크부대'를 방문, 첫 군부대 시찰을 했다고 일제히 보도한 바 있음.
- 중국 매체들은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19일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김정은 부위원장에 초점을 맞춰 북한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하고 있음. 주목할 대목은 추도기간에는 부친의 갑작스런 사망에 황망하면서 비통한 표정의 김 부위원장에 카메라의 초점이 맞춰졌다가 영결식 후에는 당·정·군을 이끌고 국가를 경영해가는 모습에 앵글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임.
-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북한의 새 지도체제로서 김정은 부위원장의 영도를 부각시켰으나 북한 내부에서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것을 계기로 김 부위원장의 호칭 앞에 '긴' 수식어를 달고 있음. 특히 중국 관영 매체의 글과 사진, 영상이 "김정은 영도로 북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메시지 전달에 집중하는 양상임. 사실 중국에서 권력을 나눠 가진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9명의 주요 동정이 관영 매체에 소개되기는 하지만 김정은 부위원장처럼 외국 지도자의 일거수일투족이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것은 이례적임.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 관영 매체의 이런 보도는 당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음.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치·외교·안보 환경의 지형 변화가 예상되는 속에서 중국 관영 매체들이 당국의 '의지'를 대신 전달하고 있다는 얘기임. 중국은 우선 관영매체를 통한 우호적인 보도로 아직 '두터운' 관계를 맺지 못한 김정은 지도체제에 대한 지지 의사를 거듭 확인함으로써 북한 새 지도부의 마음을 사려 한다는 분석이 나옴.
- 김정은은 지난 2009년 초부터 권력 승계를 해왔고 2010년 9월 노동당 대표자대회를 통해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되는 등 3년 가까이 2인자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왔음. 그러나 중국은 김 위원장 사망 직전까지도 김정은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삼가왔던 게 사실임. 이 때문에 중국이 김정일 체제와는 달리 김정은 체제와는 긴밀하지 못하다는 분석임. 따라서 이를 만회하려는 차원에서 중국이 '과도한' 김정은 지지 제스처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옴.
- 중국 당국은 북한이 김 위원장 사망을 발표한 지난달 19일 당·정·군을 망라해서 보낸 조전과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등의 북한 대사관 방문을 통한 조문을 통해 '김정은 영도'를 언급하고 연일 뉴스 때마다 김정은 동정을 전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 포털과 중국판 트위터 격인 웨이보



에서는 김정은 부위원장을 겨냥한 비난 글이 상당함. 무엇보다 뚱뚱한 김정은 부위원장의 신체를 비아냥거리는 글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 中외교부, 北 장성택 방중설 부인(1/4)

- 중국 정부가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1월 방중설을 공식적으로 부인했음.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장성택 등이 방중할 것이라는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음.
- 홍 대변인은 장 부위원장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이 1월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일부 한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이같이 답했음. 홍 대변인은 이어 "중국과 조선(북한)은 우호적인 이웃 국가"라며 "우리는 조선과 전통적 우의와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강화해나가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지켜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일부 언론은 김영남과 장성택이 이달 10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음.

● "北라진항 열린다"...中 석탄업계 대량 증산(1/5)

- 중국이 부두 사용권을 확보한 북한 라진항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 석탄업계가 대대적인 생산 설비 증설에 나섰다. 연변일보는 5일 훈춘의 대표적인 석탄 생산업체인 훈춘광업집단이 설비 증설을 통해 올해 연간 1천만 채탄시대를 열게 됐다고 보도했음.
- 팔련성 탄광 등 훈춘 일대 3개의 탄광을 보유한 훈춘광업집단은 연간 채탄 능력이 560만에 불과했으나 지난 2년 동안 12억 위안(2천억 원)을 들여 채탄 설비를 대폭 증설, 올해부터 채탄량을 1천35만t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 이 업체가 대규모 증설에 나선 이유는 중국이 부두 사용권을 확보한 라진항이 올해부터 본격 가동돼 생산한 석탄을 남방지역으로 대량 운송할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의 창리(創立)그룹은 2008년 북한으로부터 라진항 1호 부두 사용권을 확보, 중국 두만강 유역에서 동해를 통해 남방으로 물자를 수송할 뱃길을 열었음. 이 업체는 이미 라진항 1호 부두 정박지 보수와 확장을 통해 연간 100만t의 하역 능력을 갖췄음.
- 중국은 라진항을 경유해 남방으로 운송하는 물류 확대를 위해 지난해 6월 훈춘과 북한 원정리를 잇는 두만강대교 보수를 완료했으며 지난해 4월부터 원정리-라진항 비포장도로의 포장공사에도 나섰다. 이 도로 공사는 산세가 험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완공됐으며 오는 6월께 전 구간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임. 이렇게 되면 훈춘에서 라진항을 통해 남방에 이르는 동해 뱃길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훈춘광업집단은 이미 지난해 1월 라진항을 통해 1만7천t의 석탄을 상하이 푸둥(浦東)항으로 처음 운송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자체 생산한 석탄을 남방으로 시범 운송했음.
- 이 업체는 라진항 항로 가동에 대비해 이미 상하이에는 물론 안후이(安徽)



와 산둥(山東) 등 동부 연안의 기업들에 석탄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두만강 유역에서 라진항을 이용해 남방으로 물자를 운송하게 되면 다렌항까지 철도로 운송한 뒤 화물선을 이용하거나 철도에 의존하는 지금의 운송 방식에 비해 연간 6천만 위안(100억 원)의 물류비를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중국은 한 발짝 더 나아가 북한과 러시아에 가로막혀 해상 진출이 불가능한 두만강유역을 동북아시아 무역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지투(長吉圖·창춘-지린-두만강) 개방 선도구를 북한의 라선특구와 묶어 국제적인 경제벨트로 개발하겠다는 구상도 세웠음. 라선특구를 북한과 공동 개발키로 하고 지난해 6월 착공식을 한 것은 창지투-라선특구 경제벨트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 해석되고 있음.

● 中외교부 "북중, 정상적 경제·무역 거래"(1/5)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5일 "중국과 조선(북한) 사이에는 정상적인 경제·무역 거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북한에 사치품을 수출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관련 거래는 어떠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도 위반하지 않았고 중국은 관련 결의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그같이 밝혔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존 시절 식량난에도 사치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했다고 서방 언론들이 심심찮게 전했다.
- 홍 대변인은 그러면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중국 방문 기간에 "양측이 주로 양자관계와 공통으로 관심이 있는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캠벨 차관보는 3~4일 방중해 중국 외교부의 장즈쥘(張志軍), 추이텐카이(崔天凱) 부부장과 면담했음.

라. 일·북 관계

● "도덕적 미숙아"...北 일본도 조문관련 맹비난(1/3)

-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대한 남한정부의 조문 대응을 비난한 북한이 이번에는 일본 정부의 조문 태도도 '도덕적 미숙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맹비난했음. 조선중앙통신은 3일 '대국상을 당한 조선민족의 가슴에 칼질을 한 일본의 도덕적 미숙아들'이라는 논평에서 "이웃나라의 대국상을 같이 슬퍼하고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한민족 성원의 조문길까지 가로막아 나선 일본당국의 책임은 무지막지하기 그지없는 비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 통신은 또 일본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부들의 방북도 금지했다며 "가장 초보적인 인륜에 관한 문제를 수상 노다와 관방장관 후지무라는 끝끝내 외면했다"고 비난했음. 일본 정부가 조문기간에 '납치와 핵문제'를 거론한 것에도 "더는 존재하지도 않고 뱀새도 나지 않는 납치 문제를 가지고 오랜 세월 떠들면서 조일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켰다"고 거듭 비난했음.



● **日시마네현에 北 목선…"탈북자 아니다"(종합2보)(1/6)**

- 6일 오전 11시30분께 일본 시마네(島根)현 오키(隠岐)섬 부근 해역에 수상한 배가 떠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해상보안청이 확인에 나섰다 NHK가 보도했음. 발견 장소는 오키 본섬 나구미사키(那久岬) 앞 1km 해상이었음. 배는 엔진을 단 소형 목선이고, 발견됐을 때에는 닻을 내린 상태였음. 20대와 30대, 40대 남성 3명이 타고 있었고, 별도로 시신 1구가 발견됐음.
- 해상보안청은 선체에 한글이 적혀 있는 점으로 미뤄 탈북자들일 수도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다지만, 이들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12월 중순에 북한 항구를 출발했는데, 엔진이 고장 나서 표류했고 탈북하려고 한 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고 NHK가 전했다. 배의 엔진은 실제로 고장 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탈북자가 아닌 북한 주민이 탄 배가 일본에 표류 해온 것은 이번이 처음임. NHK는 일본 정부가 이들이 북한에 돌아가겠다고 할 경우 소형 어선에 태워 보낼 수는 없는 만큼 일시적으로 일본에 상륙시켰다가 비행기에 태워 중국으로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일본과 북한은 국교를 맺지 않았기 때문임. 지난해 9월에는 동해에 접한 이시카와(石川)현 노토(能登)반도 앞바다에 탈북자 남녀 9명이 탄 목선이 흘러온 적이 있음. 당시 탈북자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10월4일 한국으로 갔음.

● **日 표류 북한인 1명 사인은 '저체온증'(1/8)**

- 최근 일본 시마네(島根)현 해상에 표류한 선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북한인 1명의 사망 원인은 추위에 의한 저체온증인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이 8일 보도했음.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 등에 의하면 지난 6일 오전 11시30분께 시마네현 오키(隠岐)섬 부근 해역에서 표류한 북한의 소형 목선이 발견됐음. 이 배에는 남성 3명과 함께 시신(남) 1구가 있었음. 해상보안본부 조사 결과 생존 북한인들은 사망자가 출항 이후 쇠약 상태가 지속됐으며 1주일 전께 숨졌다고 진술했음.
- 해상보안본부는 사망자가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중임. 생존자 3명은 건강상태에 문제가 없어 정상적으로 식사하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이들은 고기를 잡으려고 12월 중순 북한 항구를 출발했으며 엔진이 고장 나서 표류했고, 탈북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음. 해상보안본부는 이들을 조난자로 보고 나가사키(長崎)현 오무라(大村)시에 있는 법무성 산하 오무라 입국관리센터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마. 기 타

● **조선신보, 北신년사서 북미·북중 대화 부각(1/2)**



-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일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을 분석하면서 북미·북중대화를 강조했다. 이 신문은 '3지 공동사설, 2012년 구상의 전면실현 강조'라는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던 현 정권과 상종하지 않는다고 통일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조선의 노력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난해에도 조중 사이에 수뇌회담이 열렸고 조선과 미국은 두 차례 고위급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조선신보는 신년공동사설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대해 "금후 조미가 벌이게 될 비핵화 협상의 방향과 내용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라며 "(북미, 북중간) 회담에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공동의 주제로 다뤄졌다"고 설명해 북미간 대화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시사했음.
- 또 "조선의 유관국들이 권력이행기를 맞이하는 올해의 국제환경은 격동이 예상된다"며 "공동사설에 명시된 원대한 구상과 목표를 달성하자면 정세발전의 흐름에 그저 대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세를 펼쳐 주도권을 쥐어야 할 것"이라고 밝혀 대외적으로 대화공세를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음.
- 신문은 "조선은 2012년 4월에 조준을 맞춘 노선과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김정은 부위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수뇌부가 이미 상정된 2012년 역사적 단계의 목표를 에누리 없이 무조건 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정일 사망 보도로 北 여행상품 매진"(1/4)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 여행을 취급하는 관광 상품에 대한 서구인들의 관심이 크게 늘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4일 보도했음. 이 신문은 김정일 위원장의 영결식 장면이 세계 주요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북한 전문 여행사들에 문의 전화가 증가했고 주요 상품들은 매진됐다고 전했다.
- 스웨덴에 있는 북한 전문 여행사인 코리아 컨설트는 당초 2월 김정일 70회 생일에 맞춰 내놓았던 북한 여행 상품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여행사의 줄리아 달라드는 평상시 보다 여행객의 관심과 문의가 늘었다면서 "빈자리가 거의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리젠트 홀리데이 여행사의 담당자도 철저하게 짜여진 군대식 영결식을 통해 주민들의 울부짖는 영상이 방영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비밀스런 북한 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고 소개했음. 지난 7년간 북한 관광 상품을 취급해왔다는 칼 메도우즈는 "북한이 세상의 각광을 받게 되면서 성탄절과 새해에 엄청난 관심이 집중됐다"고 말했다. 이 여행사가 4월에 잡아놓은 여행 상품 2개는 이미 매진됐음. 메도우즈는 여행 일정이 차질이 없느냐는 질문에 "보통 때와 똑같다"면서 비자 제한 등에서 아무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으로 예상했음.
-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에는 100일간 관광을 중단했지만



이번에는 김정일 사망 발표 뒤 중단했던 외국인 관광을 20여일만인 오는 10일 재개기로 했다고 외신들이 베이징에 있는 북한 전문 여행사를 인용해 최근 보도했음

● "스위스, 북한 원조 대폭 삭감" <日언론>(1/4)

- 스위스가 북한에 대한 원조를 대폭 줄였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의하면 스위스 정부는 올해부터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인 개발원조를 중단하는 한편 인도적 지원 액수도 예년의 4분의 1로 줄이기로 했음. 이는 스위스 정부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도 개혁과 인권 상황의 개선 전망이 전혀 없다는 의회의 비판을 수용한 결과임. 스위스는 1995년 북한에서 수해로 식량위기가 발생했을 때 인도적 지원을 시작했고, 1997년에는 개혁·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평양에 스위스 개발협력청(SDC)의 사무소를 두고 개발원조를 시작했음. SDC는 그동안 식량 증산, 육림(育林) 등의 농업지원 사업 외에 2004년에는 평양에 비즈니스 스쿨을 개설해 국영기업 간부들에게 경영관리도 교육했음. 스위스 정부의 과거 3년간 북한에 대한 연평균 원조액은 약 680만 스위스 프랑(약 850억 원)이었음.

● "北, 시리아에 화학무기 시약 수출 시도"(1/5)

- 북한이 시리아에 화학무기 관련 시약 수출을 시도하다 그리스 당국에 적발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음. 이 신문은 뉴욕발 기사에서 북수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화학무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시약이 든 다수의 앰풀을 시리아에 수출하려 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가까운 시일 내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 신문에 의하면 2009년 11월 북한으로부터 시리아로 향하던 라이베리아 선적의 화물선이 경유지인 그리스에서 화물 컨테이너를 압수당했음. 여러 개의 나무 상자에는 유리로 만들어진 수종의 앰풀이 있었으며, 각 앰풀에는 액체와 분말 시약이 들어있었음. 소식통에 따르면 이 시약은 화학무기 사용 후 대기 중에 부유하는 화학물질의 식별에 사용되는 것임. 화학무기로 공격하거나, 공격당한 경우에 모두 이용됨. 문제의 화물선에서는 군용으로 볼 수 있는 화학 방호복 약 1만4천벌도 발견됐으며 이는 이미 작년 11월 중순 보도된 바 있음.
- 그리스는 2009년 6월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로 이를 안전보장 이사회 제재위원회에 신고했음. 유엔의 비공개 자료에 의하면 안보리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7개국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은 그리스에 대한 현지조사를 검토 중임.
- 북한과 시리아는 화학무기의 생산과 보유를 금지한 화학무기금지조약(1997년 발효)의 미서명 6개국에 속해있음.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사린과 머스터드가스 등의 화학무기 2천500~5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세계 3위 수준임.



● 潘총장 "적절한 시기 방북 용의" <교도통신>(1/5)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4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증진을 위해 북한을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권력이 김정은에게 승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 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방북 의사를 피력했음. 반 총장은 이어 자신의 방북이 '적절한 시기'에 이뤄질 것이며 관련 당사국들과 밀접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그는 "나의 주요 메시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 당사국들이 북핵문제를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북한 측이 핵 문제와 6자회담 개최 등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정치는 변하는 것이어서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 北접경 관할 中선양군구, 야간 군사훈련(1/6)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중국이 변경지역 경비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접경인 동북지역을 관할하는 선양(瀋陽)군구가 보하이만에서 야간 군사 훈련을 펼쳤음. 6일 중국 라디오방송의 인터넷판인 중국광파망(廣播網)에 따르면 선양군구 소속 모 방공여단이 최근 산둥(山東)반도와 랴오둥(遼東)반도 사이에 있는 보하이(渤海)만 부근에서 대대적인 야간 기동훈련을 벌였음. 이 부대는 60시간 계속된 이번 훈련을 통해 5차례의 진지 이전과 3차례의 실탄 사격을 통해 야간 전술 훈련과 작전 능력을 점검했다고 광파망은 전했다.
- 전방에 파견된 초병의 기상 적기 출현 보고를 따라 각급 작전 부대에 전파하고 목표물을 포착, 일제 사격을 통해 격추하는 방공 훈련을 통해 실전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전술도 점검했음. 이 매체는 이번 훈련이 정기적인 훈련이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중국은 앞서 북한의 김 위원장 사망 직후 변경지역에 대한 경비를 대폭 강화했음. 홍콩 매체들은 북한 접경지역에 2천여 명의 군 병력을 배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음. 선양군구는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태와 남북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서해에서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실시되자 지린(吉林)과 랴오닝(遼寧) 일대 북중 접경지역 예하부대에 비상 경계태세를 발령하고 전차와 헬리콥터, 박격포 등을 동원한 대규모 육·공 합동 군사 훈련을 벌였음.

● 유엔, 北 중증 영양실조 어린이 긴급지원(1/6)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이 북한의 중증 영양실조 어린이를 지원하기 위해 유엔아동기금(UNICEF)에 42만7천 달러를 긴급 제공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전했다. CERF는 UNICEF가 제공한 이 자금으로 1월부터 3월까지 북한의 중증 영양실조 어린이 치유, 필수



약품 조달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유니세프의 제프리 킬리 아시아 대변인은 "함경남북도와 량강도, 강원도 내 25개 군의 중증 영양실조 어린이들이 f-100 영양강화 우유와 고단백 비스킷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유니세프는 이번 지원에 앞서 작년 10월 세계식량계획(WFP), 영국의 비정부기구인 세이브 더 칠드런과 함께 북한 115개 군에서 5세 미만 어린이들의 중증 영양실조 여부를 조사했음. 유니세프는 올해도 이 기구와 5세 미만 어린이의 영양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종합적인 실태 조사를 함.

● "스위스 정부 올해 520만 달러 대북지원"(1/7)

- 스위스 정부가 올해 대북지원 사업으로 500만 스위스프랑(520여만 달러)을 책정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했음. 이는 스위스 정부가 지난해 대북지원에 사용한 600만 스위스프랑에서 100만 스위스프랑이 줄어든 것임. 스위스 개발협력청(SDC)의 북한사업 담당관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스위스 정부는 올해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을 중단하지만 새로운 인도적 지원사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경사지 관리사업을 하는 황해북도에서 식수위생 사업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음.
- SDC는 올해부터 40여만 달러를 들여 식수위생 사업을 진행하고 유엔기구를 통한 대북 분유지원 사업도 계속할 계획임. SDC가 올해 중단한 대북지원 사업은 평양에 비즈니스스쿨을 개설해 경영관리를 교육하는 프로그램과 유럽연합(EU)이 시행하게 된 통합해충관리 프로그램 등임.

● 러 "올해 핵미사일 발사시험 2배로 늘릴 것"(1/8)

- 러시아 국방부는 7일 전략미사일군이 올해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전략미사일 훈련 및 시험 발사 횟수를 전년 대비 2배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음.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 바딤 코발은 이날 "2012년 전략미사일군은 11차례의 전략미사일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4차례는 미사일의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것이며, 7차례는 개발 중인 미사일 시험이나 적의 미사일 방어(MD)망을 뚫기 위한 전투장비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2011년 전략미사일군은 5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그 가운데 2차례는 새로운 전투장비 개발을 위한 것이었고, 2차례는 미사일 수명 연장을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 러시아는 소련 시절 실전 배치된 핵 미사일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미사일 성능시험을 계속하는 한편 미국의 MD망을 뚫을 수 있는 신형 미사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캠프 美 차관보 방한.. '김정일 사후' 논의(1/4)

- 커트 캠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4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함. 캠프 차관보는 방한 기간 외교통상부 김재신 차관보와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만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북한의 동향을 점검하고 3차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 등 후속 대화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이 자리에서는 또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 주체도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국방수권법의 예외조항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캠프 차관보는 방한에 앞서 중국을 방문했으며, 오는 6일 출국함.

● 한미, 패트리엇 미사일 운송 '첩보작전'(1/5)

- 한미가 패트리엇 미사일을 선적한 화물선의 안전 항해를 위해 해상 첩보수집 수단을 추가동한 운항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5일 "한국행 패트리엇 미사일을 싣고 핀란드 남부 코트카항에 입항했다가 억류된 영국 화물선이 곧 핀란드를 떠날 것"이라면서 "한국과 미국이 이 선박의 안전 항해를 위해 첩보작전 형태의 운항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이 선박에 패트리엇 미사일이 실려 있다는 사실이 외신을 통해 알려지면서 해적과 국제 테러단체 요원들이 선박을 납치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정부는 이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첩보수단을 가동해주도록 미국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 미국은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패트리엇 미사일을 선적한 화물선이 이동하는 해상의 의심 선박과 해적선의 동향을 실시간 파악하는 첩보수단을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태평양 해상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위성을 가동 중이며, 하와이 등에 원거리 해상감시용 레이더를 고정 배치해놓고 있음.
- 정부의 다른 소식통은 "화물선이 핀란드를 출항하면 미국의 실시간 추적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해적선이나 의심 선박이 화물선 주변으로 움직이면 가까운 곳에 있는 미군 함정을 즉각 출동하는 계획도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 퇴치 작전을 펼치는 청해부대는 화물선과의 거리가 워낙 멀어 호송임무에 투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다.
- 영국 화물선 토르 리버티호는 패트리엇 미사일 69기 등을 선적, 지난해 12월 13일 독일 북부의 엠덴항을 떠나 이틀 후 태풍으로 핀란드 코트카항에 피항했다가 억류됐음. 핀란드 정부는 4일(현지시간) 코트카항 창고에 압류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실어 내도 좋다고 허가했으며 영국 화물선은 이 미사일을 싣고 곧 한국으로 출발할 계획임. 방사청 관계자는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예정 항로와 출항 날짜는 알려줄 수 없다"면서 "출항을 위한 행정조치는 모두 끝났고, 핀란드에서 출발하면 40여일 후 한국에 도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한·중 관계

● <한·중 정상회의 계기로 양국 FTA 협상 속도낼까>(1/4)

-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내주 정상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문제를 논의기로 함으로써 양국 간 FTA 협상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됨. 올해로 수교 20주년을 맞는 두 나라는 FTA 체결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함. FTA가 동북아시아 경제 통합과 북한 후계체제 변화에 따른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임. FTA 체결 시기와 적용 범위 등을 놓고는 온도 차이가 뚜렷함.
- 중국은 한국을 거치면 선진국 시장을 공략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해 협상을 서두르겠다는 속내를 보임. 우리는 한미 FTA 발효를 앞둔 시점에서 다시 이웃한 거대 국가에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한국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속도 조절을 희망함.
- 두 나라 사이의 FTA 논의는 이미 출발선에 와 있음. 신관학 공동연구는 2년 전 마무리된 상태임. 민감성 처리방안에 관한 정부 간 사전 협의는 진행 중임. 우리나라는 농산물과 일부 제조업 분야, 중국은 석유화학·자동차 부문 등을 민감성 품목으로 분류해 개방 예외 또는 개방 시한 유예 대상으로 분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마음만 먹고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다면 공청회,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본협상 개시만 선언하면 됨.
- 중국의 입장은 명확함. 한중 FTA의 민감성을 인정하지만 일단 협상을 시작해 이견을 조율해 가자는 것임. 작년 4월 월자바오 총리에 이어 10월 리커창 부총리는 공개석상에서 한중 FTA를 서두르자고 압박했음. 우리나라는 다소 신중함. 양국 간 경제협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때가 됐다는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중국과의 개방경제가 몰고 올 파고가 워낙 큰 탓임. 특히 농업, 중소기업 등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미국·EU와의 FTA보다 클 수밖에 없어 정부 선택의 폭을 좁히고 있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타결 후 선진국 진입을 낙관하던 멕시코가 미국 경제권에 편입되면서 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을 앓는 점도 곱씹어 봐야 할 실례임.
- 2010년 기준 양국의 교역규모는 1천884억 달러로 한미 간의 교역액 902억 달러의 두 배를 넘음. 경제역량은 큰 차이가 있음. GDP는 우리나라가 1조 달러로 중국(5조9천억 달러, 세계2위)과 비교해 6분의 1 규모에 불과함. 교역액은 중국 2조8천473억 달러이고 우리나라는 8천916억 달러임. 1인당 GDP도 우리나라가 2만591달러, 중국 4천382달러로 격차가 큼.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액은 작년 1천298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24.2%에 달함. 수입액은 842억 달러(16.6%)임. FTA가 성사되면 우



리나라는 EU, 미국, 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자유무역을 실현한 유일한 국가가 됨.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가 발효되면 2.3%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음. 휴대전화, 자동차, 기계 등 전략품목을 비롯해 중간재, 부품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체결 후 10년간 과일은 10억2천만 달러, 채소는 9억7천700만 달러의 생산이 감소하는 등 농수산업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저가 완제품의 수입 확대로 중소기업도 피해를 볼 것으로 관측됐음.

- 중국으로서는 미국, EU와 FTA를 체결한 한국을 거쳐 선진국 시장의 공략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임. 농수축산물 분야의 수출활로도 확대됨. 중국은 FTA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통 큰 양보'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접 아시아 국가들과 FTA를 성사시킴으로써 자국 중심의 아시아경제통합을 구축하려는 차원임.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 FTA의 필요성을 두 나라 모두 인식하고 있지만 개방의 폭과 수위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음. 특히 우리나라가 그러함. 협상을 하더라도 이른 시일에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음.

● <李대통령 訪中.. '포스트 김정일' 전기 마련할까>(1/4)

-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첫 순방지로 중국을 선택했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는 시기에 이뤄지는 한·중 정상 회담임. 이 대통령은 9~11일 국민 방문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등과 만나 남북관계 개선을 비롯해 경제협력, 북한 비핵화 및 6자회담 재개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음.
- 중국 역시 이 대통령이 올해 들어 처음 맞이하는 외국 정상임. 특히 중국은 김 위원장 사망 직후 상무위원 전원이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을 찾아 조문하고, 김정은을 후계자로 인정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그만큼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커질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의 방중은 포스트 김정일 시대에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전반적인 정세에 변화에 있어서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옴. 이 대통령은 중국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게 함으로써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대한 낮추려고 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이 대통령이 풀어야 할 외교적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아 보임. 우선 서해 상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다 순직한 해양경찰 문제로 국내 여론이 악화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임. 또 후 주석은 김 위원장의 사망 후 이 대통령의 전화 통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비록 중국이 외교 문제로 정상간 통화를 하는 경우가 드물다고는 하지만 북한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가운데 우리 정부에 보내는 간접 메시지라는 해석도 있음. 올해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이하고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했지만 양국 간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임.

- 반면, 경제 협력 분야는 상대적으로 '순풍'을 탈 것으로 보임. 지난 20년간 한·중간 교역액은 63억7천억 달러에서 1천8884억 달러로 30배가량 증가했으며, 통화 스와프 규모도 1천800위안(260억 달러)에서 3천600억 위안(560억 달러)로 늘어날 만큼 양국 경제 교류는 활발했음. 특히 이 대통령의 방문에는 중국이 의욕을 보이는 한·중자유무역협정(FTA) 문제에 이목이 쏠리고 있음. 벌써 양국 정상 회담을 통해 올해 초 협상 개시를 선언할 것이라는 선부른 전망도 나옴.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 측에서 FTA에 속도 내기를 원하는 것은 맞지만 아직 내부적으로 협의할 게 많이 남아 있어 당장 개시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이번 방중에서 어떤 형태로든 FTA에 대해 진전된 결과물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음. 이밖에 양국은 수교 2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논의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진행할 방침임.

● 中 "李대통령 訪中 매우 중시"(1/4)

-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4일 "중국은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을 고도로 중시한다"고 밝혔음. 홍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말했음. 홍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9~11일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회담을 하고 한중 관계와 국제·지역 문제에 관련해 깊은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음.
- 홍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우방귀(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도 만날 것이라고 전했음. 홍 대변인은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로 양국 관계의 건강한 발전은 양국의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지역 및 세계의 평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수교 20주년이라는 좋은 기회를 맞아 중한 관계를 새 수준으로 높이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음. 이에 앞서 일부 언론은 김영남과 장성택이 이달 10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음.

● 李대통령 9~11일 중국 국빈 방문(1/4)

-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9일부터 사흘간 중국을 국빈 방문함.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마련된 방중 일정으로, 취임 이후 여섯 번째 중국 방문이자 두 번째 국빈 방중임. 이 대통령은 방중 기간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후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안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4일 밝혔음. 양국 정상은 특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급서 이후 불안정해진 한반도 정세를 놓고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져 어떤 식의 해법이 도출될지 주목됨. 이와 함께 경제 분야에서 양국 간 최대



관심사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앞서 한국과 중국, 일본은 이 대통령과 후 주석이 지난 2008년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산·관·학 연구결과를 토대로 FTA 추진을 검토키로 합의한 이후 3국간 공동연구를 진행해왔음. 이 대통령은 또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중국 정·관계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고 양국 수교 관계자 및 경제인들과도 연쇄 간담회를 할 예정임.

● <中 '무기사용 금지 요구'는 이중잣대>(종합)(1/6)

- 중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한국 측에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민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무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주장을 펴 외교적 논란이 일고 있음. 이 당국자의 주장은 치안 유지권이라는 타국의 핵심 사법주권을 경시하는 비상식적 발언이라는 점에서 외교가에서 비판을 사고 있음. 외교부 이주사(司, 사는 한국의 국 해당) 뤼자오후이(羅照輝) 사장은 5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인터넷 사이트 인민망이 주관한 네티즌과 대화에서 "한국이 문명적인 법 집행을 할 것과 어떤 상황에서도 중국 어민에게 무기를 사용해 대처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음. 이는 한국이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비롯한 일체의 무기류를 쓰지 말라는 요구나 다름없는 발언임. 신중한 용어 선택을 사용해야 하는 고위 외교관이 사실상 '무조건'이란 의미의 "어떤 상황에서도"라는 전제 조건을 단 것은 이해적임.
- 뤼 사장은 중국 외교부에서 한국을 포함한 대 아시아 외교를 담당하는 핵심 당국자임. 그의 발언 전문은 인민망 사이트에 고스란히 올라와 있고 경화시보(京華時報) 등 중국 주류 매체들은 "중국 외교는 인민을 위한 것으로 어민 보호의 책임이 있다"는 발언을 크게 보도했음.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이런 발언에 대해 비록 공개적인 외교 석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고위 외교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언급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서해에서 이청호 경장이 살해당한 사건 이후에도 즉각적인 유감 표명을 하는 대신 자국 어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우리 국민의 강한 분노를 불러일으킨 바 있음. 중국은 해경 살해사건이 나기 전부터는 날로 흉포해지는 중국 어민들을 대처하려고 한국이 어쩔 수 없이 대응 수위를 높이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도 '문명적인 법 집행'을 촉구해왔음. 자국 어민들의 불법 조업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근본 원인은 외면하면서 한국의 '강경 대응'이 화를 불러온다는 '궤변' 수준의 논리를 구사해온 것임. 특히 뤼 사장의 이번 발언은 이청호 경장 살해 사건 이후 '유감'을 표명하고 잠시 몸을 낮추는 듯했던 중국 외교 당국자들의 기본적인 사고 구조의 이면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임.
- 또한 이번 발언이 네티즌과 대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뤼 사장이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네티즌들을 달래는 과정에서 문제의 표현을 썼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뤼 사장은 네티즌과 대화에서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음. 그는 "중국은 사단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이익을 지키는 마지노선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명확한 계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조용한 대중 외교' 노선에 따라 중국에 공개적으로 '싫은 소리'를 기급적 자제하던 주중 한국 대사관도 뤼 사장의 문제성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분위기임. 대사관 핵심 관계자는 뤼 사장의 발언을 '비상식적 발언'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국 경찰도 흉기 등 무기를 든 상대방을 만났을 때는 무기류를 사용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음. 외교기에서는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민에게 무조건 무기류를 쓰지 말라는 뤼 사장의 요구는 자기와 남에게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이중잣대' 논리라는 지적이 나옴.
-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난사군도(스프래들리)에서 지난 2005년 베트남 어선에 발표해 어민 10명을 사살한 적이 있음. 당시 중국은 이들이 해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베트남은 사망자들이 모두 보통 어민이라고 맞섰음. 중국은 2007년 7월에도 난사군도 해역에서 베트남 어선에 발표해 5명이 부상했음. 아울러 필리핀은 작년 6월 난사군도에서 자국 어민들이 중국 군함으로부터 총격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한편 뤼 사장의 이번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의 9-11일 국빈 방문을 앞두고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평가임.

● 李대통령 내일부터 사흘간 중국 국빈방문(1/8)

- 이명박 대통령은 9일부터 중국을 국빈 방문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벌임. 이번 방중은 이 대통령 취임 후 6번째이며, 국빈으로는 두 번째임. 중국은 2012년 들어 첫 외국 국빈 초청임. 이 대통령은 방중 첫날인 9일 우방귀(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곧이어 후 주석이 주관하는 공식환영식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국빈만찬까지 참석할 예정임.
- 이번 정상회담은 외교·안보면에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후 한반도 정세가 유동성이 커지는 시기에 열리는 것이어서 논의 결과에 한반도 주변 강국은 물론 전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김정은 체제'로 개편되는 북한의 대(對)중국 의존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돼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 등을 놓고 중국이 어떤 견해를 내놓을지 주목됨.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도발 이후 다소 냉랭해진 것으로 평가되는 한·중 관계에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함께 경제면에서는 양국간 교역 규모가 커지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 대통령과 후 주석간 회담에서 진전된 합의 사항도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이어 서해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중 해양경찰이 순직한 사건을 둘러싸고 국민감정이 악화한 만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양국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이 대통령은 순방 이튿날인 10일에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면담 및 만찬을 열고, 앞서 한·중 수교 20주년 관계자 간담회, 한·중 경제인 오찬에도 참석할 계획임. 이 대통령은 11일 현지 한국 기업인과 조찬을 함께 한 뒤 이날 귀국할 예정임.

다. 한·일 관계

● <한일관계 올 한해 험로 예고>(1/4)

- 올해도 한국과 일본 사이의 대한해협에는 일본군 위안부와 독도 영유권, 동해표기 문제로 3각 파도가 몰아칠 전망이다.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높일 예정인 가운데 3월 일본의 교과서 검정 발표와 4월 국제수로기구(IHO) 총회를 앞두고 독도 영유권·동해 표기를 둘러싼 외교갈등도 재연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서임.
- 정부는 조만간 일본에 '위안부 중재위' 구성을 제안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양자협의 제안을 일본이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한일청구권협정에 규정된 다음 단계를 밟겠다는 것임. 1965년 체결된 청구권 협정은 제3조에서 '양국간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 규정한 뒤 해결되지 않을 때는 3명의 중재위원(양국이 1.5명씩 선임)으로 이뤄진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음. 특히 중재위원은 중재위 구성을 제안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게 돼 있어 정부는 이미 내부적으로 중재위원 후보군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파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국제법 전문의 외국인 변호사가 주요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는 말도 들림. 외교통상부는 12일 청구권협정 태스크포스 자문위원 회의를 열어 중재위 구성 제안 시기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다만 자문위원 중에는 일본에 양자협의 수용을 한 번 더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중재위 제안 시기가 다음달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임.
- 동해의 영문표기 문제는 4월 23~27일 모나코에서 열리는 IHO 총회에서 최종 결론이 남. 이를 위해 IHO 내 실무그룹은 막판 논의를 3월말 정도까지 진행,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서로 제출할 예정임. 실무그룹 내에서 남북한은 동해와 일본해의 병행표기를, 일본은 일본해 단독표기를 각각 주장하고 있음. 다른 국가 중 일부는 분쟁해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우리 입장을 지지하고 있지만, 미국과 영국 등은 단일명칭원칙에 따라 기존 일본해 표기를 지지하고 있음. 실무그룹의 보고서는 이런 의견을 이유로 논의 경과만 담은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됨. 이렇게 되면 이번 총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총회(2017년)까지 현상유지(일본해 표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임.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현재 막판 물밑 교섭에 '올인'하고 있음.
- 이밖에 독도 문제는 3월말로 예정된 일본의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에 포함될 전망이다. 일본은 자체 방침에 따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검정 결과를 초교(2009년), 중학교(2010년), 고교 순서로 발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독도를 둘러싼 양국간 긴장의 파고도 더 높아질 전망이다.

● 日, 주한 대사관 화염병 투척에 민감 반응(1/8)

- 일본이 8일 서울의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발생한 화염병 투척 사건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음. 교도통신은 이날 오전 주한 일본대사관의 화염병 투척 사실을 연합뉴스를 인용해 긴급 기사로 타전했음. 이 통신은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라고 밝힌 중국인 남성이 화염병 4개를 대사관에 던졌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면서 범인이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전했다.
- 통신은 한국의 박석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이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유감의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음. 통신은 이어 무토 대사가 박 제1차관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NHK방송도 중국인 남성이 주한 일본 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졌으며, 이 남성은 자신이 중국인이며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였다고 주장해 일본 정부에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음.
- 지지통신은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중국인이 최근 도쿄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출입문 방화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 중국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한국 경찰이 신중히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정부 "日대사관 화염병 투척, 경찰조사 보고 조치"(1/8)

- 정부는 8일 오전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발생한 30대 중국인의 화염병 투척 사건과 관련해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로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중 양국은 형사 사법 공조조약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각각 맺고 있어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범죄가 확정될 경우 해당 중국인은 중국 측에 신병이 넘겨질 가능성이 높음.
-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자신의 외할머니가 일제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동원된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며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투척한 중국인 류모(38)씨를 붙잡아 조사 중임. 박석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이날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나라에 주재 중인 외국공관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뜻을 표명했음.

라. 미·중 관계

● 中외교부, 美 국방수권법에 반대 표명(1/4)



- 중국이 사실상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에 해당하는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반대하는사를 분명히 밝혔음.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국내법이 국제법 위에 올라서는 것에 반대 한다"고 밝혔음. 홍 대변인은 이어 "제재는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확한 방법이 아니다"라며 "대화와 담판이 정확한 해법"이라고 주장했음. 홍 대변인은 "중국은 이란과 정상적이고 투명한 거래를 유지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어긋나는 무역, 에너지 거래는 없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작년 12월 31일 '커크-메넨데스 법안'으로 불리는 국방수권법에 서명했음. 이 법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 주체도 미국의 금융기관과는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국제금융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이런 조치는 사실상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에 해당한다는 평가임.

● 방중 캠벨 미차관보, '포스트 김정일' 논의(1/4)

- 미국의 한반도 정책 실무 책임자인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4일 베이징(北京)에서 중국 외교진용과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함. 캠벨 차관보는 3일 밤 베이징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캠벨 차관보가 누구를 만날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우선 카운터파트인 추이텐카이(崔天凱) 외교부 부부장과는 만남이 유력시됨. 캠벨 차관보와 추이 부부장은 미국과 중국 간의 아시아·태평양 사무협상의 수석대표임. 베이징의 미국 대사관 대변인은 "캠벨 차관보가 방중 기간에 중국 고위관료들을 만나 최근 북한과 미얀마 문제 등을 포함해 양자 및 지역, 세계적 이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가 전했다.
- 캠벨 차관보는 미국 고위관리로서는 처음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중국을 방문했음. 캠벨 차관보는 방중 기간에 중국 고위층과 만나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 대해 집중적인 탐색을 하는 한편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 의지를 북한에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됨. 캠벨 차관보는 중국 방문에 이어 한국, 일본을 방문하고 7일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음.

● 中사회과학원 "2011년은 美 아시아 복귀의 해"(1/5)

- 중국 국무원 직속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이 2011년은 미국이 실질적으로 아시아로 복귀한 해였다고 평가했음. 사회과학원 산하 아태·글로벌 전략연구원은 4일 펴낸 '2012년 아시아태평양지역 발전 보고서'에서 미국이 지난해 일본, 한국, 필리핀, 호주 등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여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아시아로 복귀했다고 지적했음. 보고서는 경제적으로도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의 틀을 제시하고 나선 것은 아시아 복귀와 관련한 중요한 움직임이었다고 설명했다.



- 보고서는 미국의 아시아 복귀는 아태 지역의 경제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는 한편 중국의 굴기를 억제하려는 두 가지 목표 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음. 아울러 보고서는 일부 주변국들이 중국의 굴기를 우려한 가운데 미국을 끌어들이어 양다리를 걸치는 외교 전략을 구사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보고서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일부 국가들이 작년 동아시아정상회의의 장을 활용해 미국을 끌어들이어 중국을 압박했던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음. 보고서는 이런 흐름이 성장 과정에 있는 중국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새로운 전략을 통해 현명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음.

● 中, 美 새 국방전략에 거부감 표시(종합)(1/6)

-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미국의 새 방위전략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관영 신화통신은 미국이 군국주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미국이 중국을 잠재적 위협대상으로 분류했다며 긴장했음. 신화통신은 6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건설적 역할을 환영하지만 전쟁광은 안된다'는 제목의 논평 기사를 송고했음.
- 통신은 이 기사에서 "방위구조를 상당부분 재편해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에 더 많이 기여할 것으로 환영받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미국이 실행할 수도 있는 군국주의는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미국이 냉전시대의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자세로 자신의 역할을 다한다면 아태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그렇게 되면 경제발전을 위해 평화적 환경을 필요로 하는 중국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음.
- 통신은 그러나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다른 나라의 정당한 이해를 존중해 줘야 하며 무엇보다 '근육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음. 통신은 또 "힘은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인식해 미국이 군사력 사용에 최대한 조심해야 한다"며 "과거의 쓰라린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아태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군국주의를 실천하는 대신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음. 통신은 특히 "미국 스스로가 새 방위전략에서 언급한 바대로 해외에서 치른 값비싼 2차례의 전쟁의 교훈을 새겨야 한다"고도 했음.
- 환구시보는 이날 1면 머리기사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이 5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의 지속: 21세기 국방의 우선순위'라는 국방전략을 발표했다면서 여기에서 미국이 중국을 잠재적 위협 대상에 올려놓은 데 주목했음. 이 매체는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새 국방전략이 장기적으로 중국의 강국 부상이 여러 방면에서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영향을 줄 잠재적인 세력이 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음. 아울러 새 전략이 아태지역에서 미중 간 충돌을 피하려면 중국의 군사력 성장은 그 전략적 의도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는



작업과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데 대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음.

- 환구시보는 "미국의 새 국방전략은 중국의 발전이 미국을 위협할뿐더러 그런 중국이 미중 관계에 해를 끼칠 것이라며 중국을 분명한 표적으로 삼았다"는 진찬룽(金燦榮) 중국 런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의 분석을 실었음. 이 매체는 이어 "미국은 이제 많은 지역에 군사력을 배치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세계 안보 이슈들을 통제하려 한다며 중국은 미국의 그런 의도를 긴장하고 지켜봐야 한다"는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의 유명한 군사전략가인 펑광첸(彭光謙) 소장의 견해도 언급했음.

● 中환구시보, 美 새 국방전략에 '경계심'(1/6)

- 중국의 관영 매체가 미국이 새로 짠 국방전략에서 중국을 잠재적 위협 대상으로 올렸다고 경계심을 표시했음.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6일 1면 머리기사에서 미국이 현지시간으로 5일 발표한 '글로벌 리더십의 지속: 21세기 국방의 우선순위'라는 국방전략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반응했음. 이 매체는 먼저 "미국의 새 국방전략은 군 예산을 감축하면서 유럽과 중동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중심이동을 한 게 큰 특징"이라고 소개했음. 그러면서 "새 전략은 장기적으로 중국의 강국 부상이 여러 방면에서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영향을 줄 잠재적인 세력이 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음.
- 아울러 새 전략이 아태지역에서 미중 간 충돌을 피하려면 중국의 군사력 성장은 그 전략적 의도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는 작업과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데 주목했음. 환구시보는 "미국의 새 국방전략은 중국의 발전이 미국을 위협할뿐더러 그런 중국이 미중 관계에 해를 끼칠 것이라며 중국을 분명한 표적으로 삼았다"는 진찬룽(金燦榮) 중국 런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의 분석을 실었음. 이 매체는 이어 "미국은 이제 많은 지역에 군사력을 배치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세계 안보 이슈들을 통제하려 한다며 중국은 미국의 그런 의도를 긴장하고 지켜봐야 한다"는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의 유명한 군사전략가인 펑광첸(彭光謙) 소장의 견해도 언급했음.
- 미국은 육군과 해병을 중심으로 군 병력 규모를 감축하고 외국 주둔 미군 전략의 우선순위를 아시아 지역으로 돌리는 새 국방전략의 뼈대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음.

마. 중·일 관계

● "중국, 일본 왕세자 訪中 요청"(1/8)

- 중국이 일본에 왕세자 부부의 방문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8일 보도했음. 교도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올해 중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맞아 나루히토(德仁) 왕세자 부부의 중국 방문을 요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음. 통신은 중국이 왕세자의 방문을 요망한 것은 국내 대일 감정을 개선하고 양국간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일본 정부는 중국의 요청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음. 중국은 일본 왕세자의 방문 시기로 40년 전 중일 공동성명이 조인된 9월 29일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하지만 일본 정부·여당 내에서는 중국 내에서 왕세자의 방문을 환영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반일 감정을 경계하고 있음. 중국은 작년 가을 이후 베이징과 도쿄에서 열린 외교 당국의 실무급 접촉을 통해 일본 왕세자의 방문을 타진해왔음. 일본 왕실에서는 1992년 아키히토(明仁) 일왕 부처가 중국을 방문했으며 왕세자가 방문한 적은 없었음.

바. 기 타

● 美, 루카셴코 독재 벨라루스 추가 제재(1/4)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독재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 옛 소련 국가 벨라루스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승인했다고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이 보도했음. 통신은 백악관을 인용해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말 상원에서 통과된 대(對) 벨라루스 제재 강화 법안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 제재안에 따라 미국은 비자 발급 금지와 금융 제재 등을 받는 벨라루스 고위 관리와 보안기관 관계자 목록을 확대했음. 제재안은 또 국제하키연맹에 2014년 벨라루스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하키챔피언십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음. 제재 조치는 벨라루스 정부가 정치범들을 모두 석방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미국 당국은 밝혔음.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 법안을 제안했던 미 상원의원 크리스 스미트는 "제재 조치는 우리가 벨라루스 국민과 함께 있고 그들을 탄압하는 독재자에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번에 취해진 제재 조치는 앞서 지난해 초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강경 진압한 루카셴코 정권에 내렸던 제재 조치를 확대한 것임. 1994년부터 벨라루스를 통치해오는 루카셴코 대통령은 2010년 12월 치러진 대선에서 8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4선에 성공했음. 그러나 곧이어 부정 선거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이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야당 대선 후보를 포함한 600여 명의 시민이 체포됐음. 이에 EU와 미국은 벨라루스 당국이 선거 부정을 자행하고 개표 결과에 항의하는 야권 인사 및 시민들을 탄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루카셴코 대통령과 그 측근 인사들에 대한 비자발급 중단 등의 제재 조치를 취했음. EU와 미국은 루카셴코 대통령과 그의 두 아들을 포함한 157명의 벨라루스 고위 관료에 대해 EU 27개국과 미국으로의 입국을 금지시켰음.



● 22년째 새해 첫 순방지 阿국가 선택(1/4)

- 중국 외교부장이 임진년 새해에도 어김없이 아프리카를 첫 해외 순방지로 선택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4일 보도했음. 중국의 양제츠(楊潔希 <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부장은 현지시간으로 3일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를 찾았음. 양 부장은 "중국은 코트디부아르와의 양자관계 촉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트디부아르는 중국의 중요한 협력국으로 양국은 서로 지지하고 존중하는 관계"라고 역설했음. 그는 코트디부아르 방문에 이어 니제르, 나미비아를 방문하고 7일 귀국할 예정임. 양 부장은 지난해 첫 해외 순방에 나섰던 2월 9~17일에도 아프리카의 짐바브웨, 가봉, 차드, 토고, 기니 등을 방문했음.
- 중국 외교부장이 새해 첫 해외순방지로 아프리카를 택한 것은 올해로 22년째임. 중국은 비동맹 외교를 주장하던 1950년대부터 아프리카를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펴왔음. 중국이 1971년 유엔에 가입할 수 있었던 것도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지원으로 가능했다는 지적임. 중국은 또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FOCAC) 정상회의를 개최해 경제 및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아프리카에 공을 들이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의 이런 아프리카 외교는 빈국이 대부분인 아프리카 국가들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석유 등의 자원을 획득하려는 의도라는 국제적 비난도 나옴. 실제 중국은 앙골라, 수단, 나이지리아, 잠비아, 콩고 등 으로부터 원유 수입에 주력하고 있음.

● <美 '2개 분쟁 동시개입' 전략 포기하나>(1/4)

-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이 이번 주 미국 국방부의 역할과 임무, 해외 전략 등을 담은 전략 검토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국방부의 한 관리가 3일(현지시간) 밝혔음.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가 전한 검토 내용에 따르면, 미군은 동시에 두 곳의 주요 분쟁 지역에 개입할 정도로 충분한 군사력을 갖지 않을 방침임. 또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뤄졌던 것과 같은 대규모, 장기간 안정화 작전을 더는 수행하지 않을 계획임.
- 대신 미군은 주요 분쟁 지역 한 곳에서의 작전을 수행하면서 다른 잠재적 적대 세력이 또 다른 주요 분쟁을 유발하지 못하도록 병력을 배치하는 능력을 갖춘다는 구상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음.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SM)는 이날 이를 '원-플러스(one-plus) 전략'으로 칭했음. 이는 미국이 2017년까지 국방 예산을 2천610억 달러, 2021년까지 4천 500억 달러 줄여야 한다는 점과 연관돼 있음.
- 이와 관련한 일부 내역은 2013-2017 회계연도 기간의 대략적인 요강을 담은 작년 11월29일자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문건에 담겨 있으며, 이는 국방부에도 전달됐음. 해당 문건에 따르면 OMB는 CVN-79 존 F. 케네디 항공모함의 건조 착수 시점을 2년 늦추기로 한 해군의 내부 계획과 신설 이라크 주재 미 안보협력처에 5억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 방안을 각각 승인했음.
- 패네타 장관은 또 태평양지역 주둔 전력의 증강 방안에 대해서도 개략적인 윤곽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지난 2010년 2월 공개한 '4개년 국방검토(QDR) 보고서'에서 태평양 전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 해·공군이 협력해 새로운 공중·해상 전투개념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는 등 우선 사업의 수정을 시사한 바 있음. 해당 계획은 해·공군 전력을 통합해 장거리 타격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부는 이를 위해 차세대 폭격기와 신형 크루즈 미사일, 항모 발진 무인기 등을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음.
 - 해군은 또 무인 잠수함 개발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국방부는 미국의 서태평양 진출을 해군과 공군이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1월 호주 방문 당시 미국의 국방예산 감축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희생하는 형태로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한 바 있음.
 - 그러나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헤리티지재단의 매켄지 이글런 연구원은 "유럽에서 기지 축소 등으로 미군의 영향력이 감소하면 리비아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같은 장래의 분쟁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대규모의 군비 축소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음. 부시 행정부에서 국방부 감사관으로 일했던 도브 자케임은 새로운 구상이 어떤 상황에서도 "대담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음. 나아가 미국이 한 곳의 분쟁에 개입돼 있을 때 적대 세력으로 하여금 미국에 도발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음. 전략 검토 결과를 반영한 미 행정부의 공식 예산안은 다음 달 공개됨.

● 이-팔 평화협상, 내주 다시 만나기로(1/4)

- 약 16개월 만에 재개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가운데 양측이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일간지 하레츠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나세르 주데 요르단 외무장관은 이번 협상이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고 말하고 평화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았지만 긍정적이었다며 "중요한 것은 양측이 얼굴을 맞대고 만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내주 요르단에서 다음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협상은 미국을 비롯한 중동 평화협상 주재 4자 기구인 이른바 '콰르텟'의 주선으로 성사됐음. 회담에 참석한 한 외교관은 회담이 진지했다면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양측은 난상토론을 벌였으며 협상 재개에 열정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즈하크 몰호 이스라엘 측 협상 대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는 베냐민 네타나후



총리의 메시지를 마무드 압바스 수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에브 에레카트 팔레스타인 측 협상대표는 국경획정과 안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이를 문서로 몰호 대표에게 전달했으며 몰호 대표는 이를 검토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네타냐후 정부가 처음으로 국경획정과 관련한 팔레스타인 측의 입장을 담은 문서를 전달 받은 것임. 주테 요르단 외무장관은 "올해 안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의 최종타결안 작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기대치를 높일 의도는 없지만 오늘 회담을 평가 절하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추후 회담 일부는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中, 필리핀 군함 남중국해 순찰에 긴장(1/7)

- 중국의 관영매체들이 7일 필리핀 군함의 남중국해 순찰을 크게 보도했음. 환구시보는 이날 인터넷사이트인 환구망에서 필리핀 군함이 남중국해역에 진입해 순찰하는 게 포착됐고 그와 관련해 필리핀 당국은 '서필리핀 해'를 방어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필리핀 해군이 지난달 14일 마닐라 남부항에서 베그니노 아키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해밀턴급 고속정 '그레고리오 델 필라르'의 진수식을 가졌고 남중국해에서 목격된 것도 바로 그 군함이라고 소개했음.
- 필리핀은 영토주권을 지키려는 차원에서 남중국해에 군함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음. 베그니노 아키노 대통령은 오는 4월 미국을 방문해 남중국해 방어 목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첨단 F-16 전투기 12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봉황망도 이날 필리핀이 천연가스전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남중국해에 군함을 투입했다고 밝힌다고 전했다. 봉황망은 필리핀의 '그레고리오 델 필라르'호라는 군함은 최대이자 최신예라고 긴장했음.
- 필리핀은 베트남과 더불어 작년 내내 중국의 남중국해 주권 주장에 맞서 강하게 저항했음. 미국은 필리핀과 베트남을 지원하고 있음. 필리핀은 중국에 남중국해를 소유권 다툼 여부로 따져 분쟁과 무분쟁 해역으로 나누고서 공동 또는 독자 개발하자고 압박하면서 이를 골자로 '반(反) 중국 남중국해 연대'를 모색하고 있음. 그러나 중국은 분쟁 당사국들과 대화와 협상을 통한 양자해결이라는 '각개격파'해법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 필리핀, 中 군함 남중국해 진입 항의(1/8)

-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의 갈등이 연초부터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필리핀 외교부는 8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군함 한 척을 포함해 3척의 중국 선박이 남중국해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필리핀 주재 중국 대사관에 심각한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음. 현지 언론과 외신들에 따르면 필리핀 당국은 지난달 11일과 12일 중국 선박들이



남중국해 사비나 모래톱 근처에서 목격됐다면서 이 지역은 필리핀 팔라완 섬에서 123해리 떨어진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이는 지난 2002년 남중국해 이해당사국 간에 합의된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문'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필리핀 외교부가 밝혔다. 남중국해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 부존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 등 주변국 간에 영유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음.
-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7일 인터넷사이트인 환구망에서 필리핀 군함이 남중국해역에 진입해 순찰하는 것이 포착됐다는 내용을 크게 보도하면서 긴장감을 표시했다. 앞서 필리핀 해군은 지난달 14일 마닐라 남부항에서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해밀턴급 쾌속정 '그레고리오 델 필라르'의 진수식을 갖고 이 군함을 남중국해 순찰 활동에 투입했다.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